대한언론

Korea Journal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

대표전화 02)732-4797~8
Fax 02)730-1270
E-mail kjc1405@kjclub.or.kr

자매 On Line 매체
■대한언론 Kjtv
■대한언론 Knews

SINCE 1977 www.kjclub.or.kr 月刊 11 2025년 11월 1일(토) 제 476호

‘다수결 횡포’ 민주주의 멍든다

민주당, 대법원장 청문회 등 사법부 맹공

이도선
주필
전 연합뉴스 논설실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요즈음 집권당이 하는 꼴을 보면 가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 위세를 있는 대로 부리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품격을 한없이 추락시키고 대한민국 정치를 세계의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 국회가 과연 국민을 대표하는 선량(選良)들이 국정을 심의하는 곳인지, 아니면 망나니들의 난장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다.

압권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더니 국정감사에서는 ‘대법원장 감금 논란’까지 빚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인사말만 하고 국감장을 뜨는 관례를 깨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억지로 ‘참고인 신분’을 떠안기고는 민주당 의원들의 우격다짐을 방치했다. 참고인은 본인이 동의해야 하나 조 대법원장의 동의는 물론 없었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증인 전원의 불참으로 청문회가 맹탕으로 끝나자 법과 관례를 깡그리 무시하고 국감을 청문회로 변질시킨 희대의 추태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나 “국감이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법사위는 한술 더 떠 전례없는 대법원 현장 국감에 나섰고, 민주당 의원들은 마치 점령군처럼 곳곳을 휘젓고 다녔다. 그러고도 창피한 줄 모르고 이런 모습들을 유튜브 쇼츠(짧은 영상)로 자랑스레 올렸고, 추 위원장은 후원 계좌까지 노출했다. 도대체 ‘3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뭐로 보기에 이런 망동을 태연히 저지르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고, 국감을 왜 하는지는 알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대법정 법대에까지 올라갔다가 야당이 “사법부를 짓밟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성토하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둘러댄 해명도 생뚱맞다. 천 처장이 제정신이라면 그랬을 리 없고, 설사 그랬더라도 자제했어야 마땅하지 사진 찍어 자랑할 일은 결코 아니다.

비단 법사위만이 아니다. 정청래 대표를 필두로 민주당 전체가 사법부를 맹공하며 조 대법원장을 쫓아내려는 광기가 1960년대 중국 문화대혁명 당시 홍위병 사태를 연상시킨다.

〈2면에 계속〉

회장선출 정기총회 12월 8일 (월)
송년회 12월 5일(금) 프레스센터

대한언론인회 제24대 회장을 선출하는 정기총회를 12월 8일(월) 오전 10시 30분부터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합니다. 연말 회계결산은 현 집행부가 마무리하여 책자로 만들고 대차대조표 등은 회우들에게 서면으로 보고합니다.

송년모임은 12월 5일(금)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개최합니다.

제24대 본회 회장 후보 2명 등록

기호 1 황우연 (黃宇淵)

▲ 생년월일 : 1955년 7월 17일(70세)
▲ 전화 : 010-3367-5002
▲ 학력 : 전주고 졸(1973),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졸(1977, 同대학원 정치학박사 수료, 1998), 일본 와세다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1992),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 수료(2001.2), 연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2001.7), 서울대 환경대학원 ‘CEO환경경영포럼’ 수료(2005.10)

▲ 주요 경력
*㈜MBC·경향신문 통합3기 입사(1977.3, 경향 16기)사회·체육·정치·국제부 기자*한국기자협 (수석)부회장(1988) *‘전언회’ 창립(1988)멤버, 주일특파원(1993)*제44대 관훈클럽 편집위원(1997) *미디어연구소장(1998, 퇴사) *한솔PCS(018,한솔엠닷컴) 홍보실장 상무(1999) *에너지관리공단 상임감사(2002), *한국감사협회 (수석)부회장 겸 ‘감사저널’ 편집위원장(2004),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회원(2004), *경향신문 사우회보 편집위원장(2020), *대한언론인회 산악회장(2022), *‘바른언론실천연대’ 수석부대표(2022), *경향신문 사우회장(2024~현재)

▲ 저서 『독재자 최후의 날』(도서출판 산하, 1990) : 차우세스쿠 처형을 가져온 루마니아혁명 사진·기록 수집 총정리, ‘한국기자상’ 수상작

▲ 수상 한국기자상(1991. 한국기자협회), ‘일본 法相 南京대학살은 날조’망언(1994.5.4 이달의 기자상·경향 특종상), 스포츠서울21 광고대상(2000), ‘2004 자랑스러운 감사상’(한국감사협회)

기호 2 이종세 (李鍾世)

▲생년월일 : 1945년 8월 17일 (80세)
▲전화 : 010-5232-0534
▲학력 : 전북대학교 졸업 (1967)
▲주요경력
*ROTC 5기 육군소위 임관(1967) *육군 중위 예편(1969)*동아일보 기자(1976) *동아일보 체육부 차장(1988)*한국체육기자연맹 수석부회장(1991) *동아일보 체육부장(1994) *대한 유도회 부회장(1997) *대한체육회 이사(1997)*동아일보 사업국국장급 스포츠사업팀장(2003)*대한체육회 편집위원회 위원장(2006) *동아일보 정년퇴직(2006) *경희대학교 객원교수(2007) *스포츠동아 이사(2008) *용인대학교 객원교수(2010) *21세기 스포츠포럼 공동대표(2011~현)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조직위원회 자문위원(2012) *대한체육회 홍보위원회 위원장(2013)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지역 제7부 중재위원(2015) *대한체육회 자문위원(2017)*(사)한국체육언론인회 회장(2017) *(사)대한언론인회 이사(2018)*대한체육회 스포츠영웅 선정위원회 위원장(2019) *(사)대한언론인회 부회장(2019)*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겸 서울지역 제4부 중재위원(2021)

▲수상
*동아대상(2003.4.1. 동아일보)
*동아일보 특종상(1986.7.8. ‘300억원 들인 요트장 오염’)

제24대 본회 회장 후보 "대한언론인회 발전 위한 출사표"

■ 황우연 후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변화가 가능할까. 여기서는 청년이지만 나도 칠순인데 헤쳐나갈 열정은 남아있는가. 그리고 회원님들께서 뜻을 같이 해주실 선후배 동료는 얼마나 될까. 산을 좋아해 대한언론인회 산악회와 인연을 가졌다. 이어 '대한언론' 편집위원 위촉을 받았다. 첫 편집회의에서 "제4부 퇴직 선배원로 언론인들의 모임이라면 최소한 사랑하는 현직 후배들이 정도를 가도록 격려하고 성원해주는 회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그러나 며칠뒤 "어르신들이 불편해 하신다"는 통보에 그것으로 잘렸다. 그 후엔 프레스센터 토론회 사회도 제의받았으나 방향이 정해진 것 같아 사양했다. 평균연령이 80대 중반인 대한언론인회가 지속가능발전 하려면 답은 무엇인가. 영원해야 하는가, 아니면 일부 회원의 주장으로 가다 여느 사회모임처럼 돈 떨어지면 사라질 것인가.

성향을 떠나 개인적으로 뵈면 모두 현직때 제4부 자부심으로 뛰셨던 분들이라 답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고령으로 몸 가누시기에도 힘드셔서인지 집요하게 확신을 갖고 의견개진은 꺼리시는 분위기였다. 나 역시 그랬으니까…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음과 같은 일을 해보고 싶다.

첫째, 힘들겠지만 회원님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열정을 대한언론인회의 제 위상 찾기에 쏟아붓고 싶다. 인생 마지막 황혼길에 '대한언론인회'가 쉼터가 되고, 회원인 것이 자랑스러워야 한다. 가장 쉽게 회를 알리고 변화를 알릴 수 있는 '대한언론'은 논란이 많고 회원확보에 장애가 되는 일방적 정치적 주장은 삼간다. 회원들의 동정을 많이 실어 교류의 장을 넓힌다.

둘째, 현행 월간 24페이지 발행 비용 5천7백71만여원은 면 수를 줄여 회원복지예산으로 돌린다. 시청률이 거의 나오지 않는 Kjtv(제작비 3천1백49만여원), Knews(제작·관리비 7백76만여원) 등도 계속 제작여부를 전면 재검토한다.

셋째, 봄소풍과 가을소풍은 기본으로 회원들의 품격 있고 즐거운 문화탐방 나들이 기회를 다양화한다. 몇 백만원 지원 받기위해 멀리 모시고 가서 답사는 제대로 못하고, 허리시간을 잘라 후배들이 보기에도 민망한 주제의 세미나는 폐지한다. 비용은 집행부가 지원기관을 설득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책임지고 마련한다.

넷째, 젊은 후배들에게 변화와 복지혜택을 알려 회원배가운동을 적극 추진한다. '한국기자상'처럼 권위있는 '대한언론상'을 신설, 회에 대해 식어있는 후배들과 언론사의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수상자는 회원으로 자동 가입시킨다.

다섯째, 대한언론인회 기금은 손도 못 대다가 사라지면 반납하는 돈이 아니고, 회원들을 위해 절차를 밟아 이자 등 영원한 기금 유지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회원들을 위해 활용하는 길을 모색한다.

여섯째, 언론 환경변화와 현실에 맞게 무원칙한 회원가입 자격을 정비하고, 복지 기준과 평생회비·연회비 기준도 정비, 투명하게 공지한다.

젊은 회원들 가입-복지혜택 증진

■ 이종세 후보

지난 10월 27일 저는 대한언론인회 중견 회원으로 구성된 '부월회'의 초청으로 무교동 부민옥에서 점심 접대를 받았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다보면 접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접대를 받은 것입니다. 부월회는 부민옥에서 매주 월요일 오찬을 하는 모임으로 각자 회비(2만 원)를 막내 격인 심의표(77) 전 대한언론인회 부회장에게 내는 것도 보았습니다.

저도 회비를 내려고 했지만 '퇴짜'를 맞았습니다.

이날 모임에는 모두 9명이 참석했는데 상석이라할 테이블 중간에는 한영섭(97) 원로와 박기병(93) 회장 두 분이 건강한 모습으로 나란히 앉아 계셨습니다. 보기가 좋았습니다.

저는 순간 대한언론인회 회우들이 한영섭, 박기병 원로처럼 구순의 나이에도 건강을 유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한언론인회가 2024년 발간한 회원 수첩에 따르면 우리 회우는 모두 622명(고인 포함)입니다.

이 가운데 83.3%인 518명이 80대(380명)와 90대(138명)로 대한언론인회는 초고령 집단입니다. 그렇다면 대한언론인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회우들의 건강 유지로 귀결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에 이상이 있는 회우들이 대한언론인회 지정병원에서 할인 혜택을 받고 진료를 하거나 입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 회우들의 전립선 검사, 한방 무료 침술 혜택도 복원돼야 하며 건강 강좌도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부 차원의 협조를 받거나 재벌기업의 기부를 끌어내는 한편 적자 요인이 있는 자체 사업은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일하고 싶은 회우들을 위해서는 정부의 시니어 사업예산을 따내 미디어 강사와 같은 일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봄, 가을 실시하는 문화탐방, 야유회도 횟수·장소·음식·세미나 모두 업그레이드해 모든 회우가 만족하는 하루가 되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우들의 심중을 대변하는 '대한언론' 발행 문제입니다. 정치색이 짙다는 지적을 받더라도 '할말은 하는' 논조를 유지할 것입니다.

국내 굴지의 언론이 어물쩍 넘어가는 사안도 추적 보도를 통해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제24대 회장에 입후보한 저는 이병대 제21대 회장, 장석영 제23대 회장을 모시고 다년간 부회장 역할을 하면서 쌓은 경험을 살려 대한언론인회가 보다 활기차고 역동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우들 건강유지 '의료대책' 마련

대한언론인회 주요활동

- 언론인 복지·후생·친목
- 언론관계 연구·출판
- 언론상 시상
- 언론문화 창달

李대통령 강조한 협치 없고 '일방통행'

〈1면에서 이어서〉

이 같은 사법부 흔들기는 '이재명 일병 구하기'의 눈물겨운 몸부림이다. 대법원이 대선에 앞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고 우기지만 실은 사법부마저 장악해 북한식 1당 독재 체제를 완성함으로써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려는 속셈이라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대법관 전원의 의견으로 재판이 진행됐다는 대법원의 해명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이미 조작으로 드러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등의 사전 회동설을 계속 붙들고 늘어지는 것도 그래서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현행 3심제를 4심제로 바꾸는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는 등의 자칭 '사법 개혁'도 같은 맥락이다.

야당과 법조계, 학계 등에서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며, 3권 분립을 위협한다는 등의 비난이 쏟아져도 아랑곳없다. 다수결에 따른 것이라며 외려 당당하다. 걸핏하면 국민을 들먹거리는 배경이기도 하다. 그야말로 다수결의 횡포다. 이런 현상은 민주당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압도적 과반수를 차지하면서 갈수록 심화되는 추세다. 툭하면 탄핵과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을 괴롭히던 야당 시절에도 그랬지만 지난 6월 집권당으로 처지가 바뀌자 완전히 노골적이다.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법안들을 잇따라 밀어붙인 데에 이어 9월에는 야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등 다수결 강행이 급증세다.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협치는 그림자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수결이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기본 원칙의 하나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그렇다고 다수결 주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소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숙의와 타협을 배제한 다수결은 '다수에 의한 독재'의 또 다른 표현으로, 진영 대립을 심화시키고 사회 갈등을 부추겨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최악의 흉기일 뿐이다. '민주주의'를 참칭하는 북한과 중국 공산당이 딱 그렇지 않은가. 민주당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가치 중심의 민주주의를 지향할 때 비로소 다수결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다수는 언제든지 소수로 바뀔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껏 드높이는 한류의 세계적 인기에 걸맞게 우리 정치도 이참에 승자독식의 구태를 벗어던지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관용과 신뢰와 절제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차원 높은 수준으로 진화하길 간절히 고대한다.

이재명 정부 '외교' 쿼바디스!!!

'실용' 포장한 양다리 '셰셰' 외교로는 안된다

이규진
총괄부회장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주석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을 열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문을 닫는 강대국 권력정치로 막을 내렸다.

세계 패권을 노리는 미국과 중국 간 강대국 정치'쇼'에는 개최국이자 의장국인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1일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에 오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도 어쩔 수 없이 작아지기만 했다.

세계 언론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 나올까 촉각을 곤두 세웠고, 시진핑은 현란한 트럼프 협상술에 어떻게 대응할까를 주시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참석에서부터 아시아 순방이 시작된 지난달 26일부터 계속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러브콜을 읊어대 여론몰이를 했다. APEC은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밖에 없었다. 21개국 세계 각국 정상이 참석하는 APEC의 현주소를 잘 말해주고 있다. 공동성명도 G2(미국과 중국)의 입 맛에 맞지 않는 내용은 내놓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다자외교를 멀리하고 개별외교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열린 APEC 총회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이쯤해서 외교(Diplomacy)란 무엇인가 라는 원초적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 의미로는 '국가간 관계'를 말하지만 국제정치에서는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나 관계' 쯤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이익(國益)은 외교에 있어서 알파요 오메가다. 뻔히 알면서도 강대국에 굴종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아부를 펼쳐야 하는 것이 다 국익을 위해서다. 국가이익 앞에서는 영원한 아군도 영원한 적도 없다. 21세기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는 미국의 국제정치 학자이자 지정학 전문가인 조지 프리드먼은 "우리에게는 항구적인 동맹도 영구적인 적도 없다. 항구적이고 영구적인 것은 오직 국가이익뿐"이라고 적나라하게 설파했다.

이재명 정부는 정부 출범과 동시에 강대국의 권력정치 현실에 부닥쳤다. 그동안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미경중(安美經中), 즉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쳐왔는데 미국의 한쪽을 선택하라는 강압에 양다리 노선을 더 이상 고집할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은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는 정책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 8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를 추구하는(peace making)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 돕는 (pace making)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듣기 좋은 아부(?)를 마다하지 않았는데 돌아온 것은 약속한 3천5백억 달러를 현금으로 그 것도 선불로 투자하라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중국이 우리의 뒷배가 되어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그야말로 무지하거나 순진하다. 중국은 작년부터 서해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인공 구조물을 세우고 사실상 서해 바다를 자신의 내해(內海)로 만드는 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한국언론 사이트를 위장해 가짜뉴스를 양산해 한국정치에 간접 침략을 감행하는가 하면, 이른바 총성없는 무한전쟁 '초한전'(超限戰)을 펼쳐 '공자학원' 등을 통해 우리 사회 구석구석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비밀이다.

'샌드위치 외교' 벗어나야

G2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된 한국외교의 탈출구는 어디에 있을까. 우선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정권 실세들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 국가이익이 무엇인가에 천착해야 된다.

일본을 향해 '죽창가'나 부르고 미국을 향해 "양키 고 홈!"을 외쳐서는 미래가 없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만 자초할 뿐이다. 특히 외교에 '색깔'을 입히는 것은 금물이다. 우리나라의 진보좌파들은 아무데나 색깔을 입혀 국민들을 선동하려고 하는 나쁜 버릇이 있는데 국제정치에서는 안 통한다. 불이익만 돌아올 뿐이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트럼프를 만나 일·미(日美)간 신 황금시대(New Golden Age)를 외치면서 충실한 미국의 협력자가 되겠다고 일본 특유의 아부외교를 펼친 배경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일본 국내에서조차 "너무 굴욕적이지 않으냐"는 비판을 무릅쓰고 트럼프가 요구하는 방위비 증액과 안보동맹 강화 등을 통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안보전략에 적극 참여하고, 굴욕적인 조건의 5천5백억 달러 투자에 흔쾌히 "예스"라고 동의한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 일본 특유의 계산이 숨겨져 있을 것이 분명하다.

외교는 말로하는 전쟁이라고 한다. 트럼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하다고 생각되더라도 "날강도 같다"느니 "무도하다"느니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같은 막말을 마구 해대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카타르시스할 수는 있어도 외교에는 결코 이로울 수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국가이익에 결코 도움이 안된다. 냉정한 현실인식 아래 설득논리 개발과 통찰력을 통한 신외교전략만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한미동맹 현실에 바탕 '신외교전략' 펼쳐야

민주당 사법개혁, 차베스式 법치 파괴

국민의힘 "조희대 사퇴 겁박은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

서옥식
본회 부회장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현대사 5대 독재자들의 흑역사를 보면 모두가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법의 이름으로 법치의 파괴를 통한 사법부의 장악을 실현했다는 공통성이 있다. 나치 독일의 악랄한 히틀러, 옛 소련의 '인간백정(human butcher)' 스탈린, 이탈리아의 잔인한 파시스트 정권의 무솔리니, 스페인 내란 후의 프랑코 총통,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과 대약진운동에 비견되는 사회주의 '붉은 유토피아' 정책인 볼리바르혁명(Bolivarian Revolution)으로 세계 최대 산유국 베네수엘라를 거지로 만든 좌파 독재자 차베스가 그렇다. 이밖에도 사법부 장악을 독재정권 유지 발판으로 삼은 자로는 김일성, 카다피(리비아), 오르반(헝가리)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의회에 이어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를 장악함으로써 반대 세력을 억압하는 것도 모자라 체포·구금·살해함으로써 독재 체제를 유지해 나갔지만 형식적으로는 합법을 가장한 법적 절차를 따랐다는 점이다. 이들은 거의가 거짓말과 말바꾸기·위선·억지·왜곡·조작·날조·편가르기·갑질·마타도어(흑색선전)·반칙의 달인으로 법치파괴를 일삼았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제도 개혁안에는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고 ▲법관평가제 도입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구성 다변화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월 20일 사법제도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또한 헌법재판소를 최종심으로 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행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실상 '4심제'를 의미한다.

그러나 개혁안 중 대법관 증원과 4심제 도입은 8개 사건에 12개 범죄혐의로 5개 재판을 받던중 대선후 재판이 무기 중단된 전과 4범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없지 않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중 임기 만료되는 10명의 대법관을 포함, 대법관 정원 약 90%에 달하는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등 대법원을 완전히 자기편 사람들로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심제는 사법권은 법원에 있고 최고법원은 대법원으로 한다는 헌법 제 101조 1·2항, 대법원이 재판을 최종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는 헌법 제107조 2항과 배치돼 위헌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헌법소원 대상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법률 개정사안이라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는 일부 주장도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 제111조 2항에 따라 정원이 총 9명이며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토록하고 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서 보듯 지금 사실상 민주당 장악하에 있다.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돼 설사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헌재에서 4심이 적용돼 무죄선고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히틀러·스탈린 등 정권장악 위해 사법부 장악

민주당은 이밖에도 소위 '낸란사건 특별재판부' 설치와 함께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을 고쳐 이 대통령의 재판을 공식적으로 중지시키고 대장동 배임죄 등 12개 범죄를 무죄로 만드는 방안까지 언급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국가의 최고 유권해석기관인 법제처장까지 나서 국민이 결단하면 이 대통령의 연임까지 가능하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 헌법 제128조2항은 대통령의 연임 또는 중임과 관련된 변경은 헌법개정 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거대 여당 민주당이 정부조직법을 일방적으로 고쳐 77년된 준사법기관 검찰청을 해체한 데 이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한 사람 쫓아내려고 17년 된 방송통신위원회법을 폐기하고 이름만 그럴싸하게 바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이란 것을 만들더니 '아니면 말고'식 괴담 등 가짜뉴스를 퍼뜨려 사법부 최고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국정감사장에 끌어들여 사실상 90분간 '감금'상태에서 조롱하고 사퇴를 겁박했다며 "이는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할 때 써먹었던 방식과 닮아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는 문제를 논의했다는 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의 '비열한 면책특권 발언'과 관련, "민주당이 AI로 조작된 허위 녹취, 지라시 수준의 가짜뉴스까지 국회에서 틀어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사퇴까지 겁박했다"며 민주당 정권을 차베스 정권에 비유했다. 최 대변인은 "그래서 민주당에 더불어허위당, 더불어조작당, 더불어선동당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민주당이 추진하는 '친여 특별재판부' 법안은 위헌이다. 특정 사건 재판부를 강제로 지정하고 행정부까지 끌어들여 판사 구성을 바꾸겠다는 발상은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꼴"이며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폭주이자 사법부까지 졸로 보는 오만한 행태"라고 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1999년 2월 대통령에 취임한 차베스는 사법부 장악을 위해 그해 8월 사법부에 대한 긴급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최고재판소인 대법원의 기능을 배제하고 사법비상위원회(Judicial Emergency Committee)를 설치한다. 이어 12월에는 국민투표로 신헌법을 제정, 자신의 재선을 허용하고 2004년엔 대법원 판사를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려 28명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운다. 집권기간 중 하급법원에 임시기간제 판사 500여명을 지명해 이들을 승진시키는 방식으로 종신직을 부여하고 전국 4700여 판사와 법원 직원중 절반 가량을 부패혐의 등으로 조사해 중범자를 파직 또는 면직시키는 방법으로 법관들의 차베스에 대한 지지선언 등 충성을 이끌어 냈다. 입법권을 완전히 장악한 차베스는 선거법개정으로 2005년엔 연동형비례제, 2009년엔 병립형비례제를 실시함으로써 장기집권 발판을 완전히 마련한다. 수년전 한국의 민주당 등 야권이 도입한 연동형비례제는 20여년 전 이미 베네수엘라에서 써먹던 것이다.

차베스의 사법파괴와 이에 편승한 돈 풀기 좌파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세계 1위의 산유국 베네수엘라는 2018년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 약 1,700,000%,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39%, 국가부채비율 182%, 온두라스에 이은 세계 제2위 살인율(인구 10만명당 53.7명)을 초래하며 2400만 인구의 90%인 2160만 명을 절대 빈곤층인 '거지'로 전락시켰다. 공식 환율은 100만 볼리바르 당 한화 5000원이지만 암시장에서는 화폐 가치가 아닌 지폐 무게를 저울에 달아 종이돈 1kg(2만 볼리바르)당 한화 10원에 환전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지폐는 화장실 휴지나 불쏘시개로 쓰였다. 수십만 여성이 브라질 등 인접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몸을 팔아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 왔다.

세계 학자들은 경제가 무너지고 민생이 파탄나도 정권이 유지되는 지구상의 기이한 두 나라로 베네수엘라와 북한을 꼽고 있다. 그래서 정치 역사 경제 사회학자들은 차베스 정권을 주의깊게 연구해 왔고 현재 이에 관한 국제적인 연구 논문 만도 20여편에 달한다. 국내에서도 국힘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도 과거 '베네수웰라 REPORT - 경제가 망해도 정권이 지속되는 사례연구'라는 33쪽의 연구 보고서를 낸 바 있다.

히틀러는 1933년 총리 취임후 의회의 의결없이 내각이 법을 제정·개정할 수 있는 전권법(Enabling Act) 시행으로 의회를 무력화시킨 후 대법원장과 주요 판사들을 나치당원 등 자신의 측근으로 교체했으며 정치범, 공산당원들을 심판한다는 구실로 이들을 전담 재판하는 특별법원을 만들고 재판을 통제하는 재판지침 배포로 사법부를 독재 통치의 시녀로 만들었다.

1936년 집권한 스탈린은 이른바 대숙청기간(Great Purge, 1936~1938)에 대법원격인 최고재판소를 '스탈린주의 이념' 심판기구로 만들어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는 판사, 공산당 간부, 군 장성, 지식인, 일반 시민들을 '반혁명분자', '간첩', '자본주의 협력자'로 몰아 68만여명을 법적 근거없이 처단했다. 이 기간에 수백만 명은 굴락(Gulag) 강제노동수용소로 보내졌다.

국민의 힘, 독재에 침묵하는 국민 마음 열어야

좌파가 장악한 문화예술계 외연 확장 시급

김 화
본회 이사 · 편집위원
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0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제공)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민주주의가 파괴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민주주의가 죽이고 있다. 숫자의 힘이 민주주의 근본이라고 착각한 '선출된 권력 최상'의 '색맹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라는 '위장된 민주주의' 유령을 내세워 대의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정권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 장악하고 마지막 남은 사법부까지 자신들의 입맛대로 조종하려고 사법부를 겁박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능멸하고 있다. 그 속셈이 무엇인지는 양식 있는 국민들은 알고 있다. 레임덕이 오기 전 이 대통령 임기 초기에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제거와 장기집권을 위한 레일을 깔고 있다는 것을.

2025년 10월 13일 여의도 의사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은 사법부 장례식장을 방불케 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인사말을 하기 위해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 아닌 참고인으로 즉석에서 발표한 후 90분간 앉혀놓고 국정감사 본질에서 벗어난 재판 내용의 정치공세로 일관했다. 대선 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2심 무죄 사안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선거개입이라고 트집 잡고 인신공격 질문을 토해냈다.

특히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조희대 대법원장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들면서 친일 사법부라고 조롱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이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질문의 대부분이 이 대통령의 대법원 파기 환송 사건이었다. 아무리 민주주의는 말로 하는 정치라고 하지만 정치가의 말에는 역사적 서사가 있어야 한다.

역사적 서사가 없는 말은 폭력이다. 민주주의는 말로 하는 정치이지만 정권의 결과는 업적으로 평가한다. 계엄이 아니라도 헌법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관 14명을 26명으로 증원하고, 특별재판부 설치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추진하고 있다. 입법부인 국회가 재판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야"라고 했다. 선출된 권력은 최상위 계급이라는 이 대통령의 말은 합법적 선거독재를 자행한 헝가리 총리 빅토르 오르반의 "정치에선 늘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말과 상통한다. 오르반은 2014년 헌법재판소 판사를 11명에서 15명으로 늘려 새로 생긴 4명의 자리를 측근으로 채웠다. 민주당 정권은 사법부에 이어 언론장악에도 나섰다. KBS 11명의 이사를 15명으로 늘려 진보진영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법을 통과시켰다.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헌법 가치와 질서는 도외시되고,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3권 분립은 무너져가고 있다. 균형과 견제, 상생의 정치는 사라졌다. 민주주의는 다름의 인정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은 내란 정당이므로 해산돼야 하고 지도층은 사람이 아니라고 상대조차 하지 않았다. 정치는 거칠어지고 야당의 존재는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민주당은 여당이 된 후에도 여전히 야당처럼 행동하고, 오로지 숫자의 힘으로 독재를 하고 있다. 이는 상생의 정치가 아니라 '근육질 정치', '정글 정치', '제로섬 정치'다. 비상계엄은 몇 시간 만에 해제 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되고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을 청산한다면서 내란을 일으키려는 것 같다.

독재는 민주주의와 민심을 앞세워 다가간다. 독일 나치 히틀러와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그랬다.

이런 정치풍토에서 국민의 힘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 하나도 민주당의 표결로 막힌 상황이다. 국민의 힘은 생존의 막다른 골목에 접어들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여의도 정치를 벗어나 거리에서 의식 있는 국민들의 닫힌 마음을 열어야 한다. 장동혁 대표도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나라"라고 통탄했지만 국민들의 침묵은 사회가 붕괴되어 가는 신호다.

그래서 장외투쟁도 방법을 바꿔야 한다. 대도시의 중심가에서 동원된 당원으로 숫자를 과시하는 투쟁보다 자발적으로 걸어오는 한 사람의 무당파 중도층을 상대로 시장에서, 골목에서 민주회복을 설득하고 함께 투쟁해야 한다. 그래야만 1명이 10명 되고, 천명 되고, 만명 되고, 수백만 명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윤석열 어게인'과 확실하게 절연해야 한다. 국민의 마음을 얻고, 국민과 함께 민주당 독재에 항쟁해야 한다.

국민의 힘이 외연을 넓히고 함께 투쟁할 우선 대상은 문화 예술계다. 국민의 힘이 가장 취약분야가 문화 예술계다. 대한민국 문화 예술계는 좌파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 좌파가 장악하고 있다. 이름 있는 문화 예술인들

우파, 문화계 등한시 제도권 권력에만 치중

여의도 정치 벗어나 중도층 중심 장외투쟁해야

은 거의 좌파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좌파는 재빨리 문화 예술이 인간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문화 예술계 인사들을 대거 포섭했다. 그리고 양으로 음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반면 우파는 문화 예술계를 등한시 하고 제도권 권력에만 주력했다. 민주당 등 좌파는 내편 문화 예술인들은 악착같이 챙기지만 우파는 단물만 쏙 빼먹고 권력이 떨어지면 외면하고 돌아선다. 따라서 우파는 전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면적이 좌파보다 좁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재명 대통령은 '레임덕' 대신 '취임덕'이란 말이 나돌 만큼 집권 초부터 폭주 기관차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지지율이 갈수록 내리막이다. 서민층만 압박하는 부동산 정책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마약수사와 외압수사팀 내부 분란, 대통령과 민주당의 엇박자로 이 대통령 권위가 상처를 입었다. 국민의 힘은 이 기회에 한 발 더 열리기 시작한 국민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걸어가면 길이 생긴다. 그 길은 국민의 힘 자생력으로 가야한다.

정부 조직법 개정 검찰청 78년만에 역사속으로

형사사법 시스템 어떻게 변하나?

전의식
본회 편집위원 ·
전 서울신문 부국장

정부조직법 통과로 인해 검찰청이 폐지되며 내년 9월부터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제공〉

법조 3륜 중의 하나로 사법 정의 구현에 실질적 역할을 맡아온 검찰청이 2026년 9월에 문을 닫게 된다. 그 대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검찰의 업무가 나눠진다.

지난 9월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174명 찬성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대한민국 수립 후 78년간 존속해 온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 법안도 의원 투표 전에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등은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17시간 넘게 펼치면서 반대 의사를 주장하다가 본회의장 투표가 선언되자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투표 참여를 포기했다.

이날 개정안 통과로 대한민국 건국 후 기소권과 수사권을 함께 누려온 검찰청의 막강한 기능은 피의자 기소권한만 갖는 공소청이 법무부 산하에 신설되고 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따로 설치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으로 해마다 입지가 줄어들더니 이제는 검찰청의 명칭과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내년 9월부터는 완전히 사라지는 셈이다.

법안이 통과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역사는 오늘의 검찰개혁 법안 통과로 우리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됐다고 기록하게 될 것이다. 국민과의 검찰개혁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제 개인도 기쁜 마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그동안 기소와 수사권을 한 손에 쥐고 때로는 권력의 칼 노릇도 마다하지 않았던 검찰의 자업자득이 아니냐"는 날카로운 반응도 적지 않다. 집권자가 바뀔 때마다 입맛에 맞는 행동을 서슴지 않은 일부 정치 검찰을 향해 쏟아낸 발언이겠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한 번은 경청할 내용이 아닐까 싶다.

즉 우리나라 검찰 제도는 1948년 출범 시기부터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이 갖는 구조여서 때로는 권력 집중이 권한의 남용을 묵인한다는 지적을 받은 일도 있다. 그래서 정권이 교체되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논의가 검찰개혁이었고, 이러한 검찰 권력 분산 관점이 이재명 정부의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분리의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피의자 기소 권한 신설 공소청 법무부 산하
범죄수사 중대범죄 수사청은 행안부 소속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청 폐지가 내년 9월까지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다지만 "오랜 시간 존속해 온 조직을 없애고 생소한 신설 기구로 대체하는 작업이 기대만큼 완성될지는 의문"이라는 우려를 보인다. 현재 검찰청 소속 검사는 2천3백 명 정도. 거기에 수사관과 주무관까지 포함하면 적지 않은 인원이다. 또 검사 중에서 피의자 기소와 공판업무를 주로 하는 검사는 3백여 명이고 1천7백 명 정도의 검사가 전국의 각급 검찰청에서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내년 가을부터 검찰청은 없어진다는데 그 많은 직원의 거취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 9월 정부, 여당이 신속히 처리한 검찰청 폐지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강력한 조직 개혁의 시도가 있을 것으로 각오는 했었겠지만 "검찰이 통째로 바뀔 것"이란 예측은 어려웠다고 한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검찰의 반발이 은근히 표면화되고 있다. 검찰 간부들이 내부망 '이프로스'에 비판 글을 올리기도 했고, 3대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원대복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파견 검사 일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공판에 검은 넥타이를 매고 나온 것은 항의의 뜻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으나 "신중하게 처신하자"라는 중견 검사들의 권유로 일단 봉합되었다는 것. 하지만 법조계에선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상태라고 우려한다. 또 올해 검사 146명이 사직을 신청한 것에 대해 매년 130명 안팎의 사표 제출은 연례적으로 있는 일이라 검찰청 폐지에 대한 직접적 반발은 아니겠지만, 지난 한 달 동안 47명이나 검찰을 떠난 것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점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일부 헌법학자와 법률가는 검찰의 권력 분산에는 동감하면서도 검찰청 폐지와 검사의 권한 재조정에 헌법 위반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 검찰동우회 회장은 "헌법 89조는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조직이 아니라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 주장했다고 한다. 또 한 회장은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일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행위라는 법률적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헌법학자인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상 검찰총장 직위가 규정되어 있으며, 필수 헌법기관이라서 상설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다"라며 "검찰총장이란 이름을 공소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 명문 규정에 반하는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에만 존재하고 법적 지위는 없어지는 것이라고 같은 신문에서 설명했다. 그러고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가 헌법상으로 사문화된 기관들이라 덧붙였다.

이런 법률적 논란에 이어 검찰이 공소청, 중수청으로 분리되는 과정에서도 예기치 않은 난제가 드러날 소지도 있다. 우선 헌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공소청 검사들은 영장 청구권을 갖게 된다. 그러나 새로운 법에는 경찰, 중수청 수사관을 지휘 감독할 권한은 없다. 수사기관들이 피의자를 조사한 서류를 받아 기소만 하는 형태다.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보완수사 요구를 할 권한조차 없다는 것이 최대 쟁점으로 등장한 것이다.

검찰개혁에 대해 원론적으로 반대하는 국민은 없다.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너무 급하게 서두른 탓인지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그중 우리 헌법에 검찰총장과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합의점 없이 외면한다면 오히려 국민에게 혼란을 안겨주는 일이다.

“정치인들 역사에 대한 무지 꾸짖었다”

‘건국전쟁 2’ 김덕영 감독, SNS에 올린 글 요약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7일 당직자들과 함께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2’를 관람했다. 이에 민주당은 물론, 진보 진영, 심지어는 국힘당 내부에서도 동조해 장동혁 대표의 영화관 관람을 비판했다.
이에 김덕영 감독은 “보수우파 정당, 정치인들의 역사에 대한 무지와 역사전쟁에 대한 비겁함을 꾸짖지 않을 수 없다”며 “당신들의 무지로 대한민국 역사법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한 생생한 현장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맞받았다. 다음은 김덕영 감독이 SNS에 올린 글의 요약이다.(편집자 주)

지난 10월 7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영화 ‘건국전쟁2’를 극장에서 관람한 일을 두고 언론에서 난리다.

장동혁 대표를 비난하는 언론의 주장은 간단하다. 이미 역사적으로 정리가 다 된 제주4·3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건국전쟁2’를 제작한 감독도 그대로 되묻고 싶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던 암살범 김재규의 ‘재심’을 청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디 그뿐인가. 역대 대통령들이 사과하고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피해자 보상까지 완결지었다고 자랑(?)들 하고 있는 제주4·3 사건 인민유격대 가해자들에 관한 ‘재심’이 대한민국 법정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두가지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자신들은 역사를 뒤집는 재심을 해도 되고, 장동혁 대표와 영화 ‘건국전쟁2’는 역사의 법정에 문제를 제기하면 안 되는 것인가? 이건 공정하지 못한 일이다.

‘건국전쟁2’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묻고 싶다. ‘당신들은 역사적으로 정리가 다된 사건들을 왜 끄집어내고 있는가? 왜 역사의 법정에서 재심을 신청하고 있는가?’

놀라운 것은 법정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4·3 사건의 재심 재판이다. 제주4·3 사건에서 군과 경찰에 맞서 공산폭동을 일으킨 좌익 공산주의자들의 행위는 당시 군사재판 등을 통해서 엄격하고 공정하게 형이 확정되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시절에는 제주4·3 사건의 수형인 명부까지 공개된 적도 있다. 이를 토대로 제주4·3 사건에서 형이 확정된 사람들의 구체적인 신상 정보가 공개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물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법부는 2022년 제주4·3에 대해서 만큼은 재심을 받아주는 선심(?)을 베풀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시절의 일이다.

‘지난 2022년 8월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은 제주4·3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검찰의 재심청구로 무죄를 받을 길을 넓혔다. 당시 4·3 특별법에는 군법회의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에 대한 재심청구만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게 돼 있었다. 그런데 한 위원장이 일반 법원에서 나온 4·3 유죄판결에도 재심을 적극적으로 청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2024년 4월 18일, 조선일보 보도)

이로 인해서 2025년 현재까지 모두 2,072명의 유죄 판결을 받은 제주4·3 사건 가해자들 중 2,072명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승소율은 무려 100%에 이른다. (출처: 제주4·3 사건 정립시민연대)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2를 연출한 김덕영 감독이 지난 10월 2일 서울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건국전쟁2 시사회에서 작품소개를 하고 있다.

심지어 공소장과 판결문조차 없는 사람들에 대한 ‘재심’도 진행됐다.

충격적인 것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인정받은 제주4·3 사건 수형인들이 국가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 절차까지 밟았다는 사실이다. 이를 통해 총 53억 5,743만원의 피해보상액이 청구되었다. 형량에 따라서 1인당 최저 청구액은 8,037만 원, 최대액은 14억 7,427만원에 달했다. (출처: 2019년 2월 22일 제주의소리)

1948년 당시 제주4·3 사건의 주동자들은 명백하게 대한민국 건국, 정부 수립의 기초가 되는 5·10선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무고한 제주도민들이 희생됐다. 바로 이 부분이 영화 ‘건국전쟁2’를 본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당시 폭동의 가담자들이 저지른 명백한 범죄행위는 수형인 명부와 같은 구체적인 물적 증거를 통해서 범죄가 입증되어 있는 상태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역사의 법정에서 가해자들을 마치 피해자처럼 둔갑시킬 수 있다는 것인가.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을 때, 보수우파 정당 소속의 정치인들 중 국회에서 제주4·3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의원은 한 명도 없다. 당시 그들은 특별법을 통해서 4·3 유죄 판결에 대해서 누구나 손쉽게 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는 조항까지 새롭게 신설했다.

보수우파 정당이 이렇게 선심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은 ‘4·3 학살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정치집단은 국민의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은 일제히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를 인용했고, 국민들은 ‘4·3학살의 후예, 국민의힘’이란 인식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 남 좋은 일만 시켜준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보수우파 정당, 정치인들의 역사에 대한 무지, 역사 전쟁에 대한 비겁함을 꾸짖지 않을 수 없다. 당신들의 무지로 대한민국 역사의 법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는 생생한 현장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사건에 대한 조사가 없다면, 당연히 발언권도 없다. 그것이 언론인의 책무이며 기본이다. 제발 영화 ‘건국전쟁2’를 보고 나서 남을 비판하길 바란다.

역사는 도그마가 될 수 없다. 늘 새로운 증거, 기록을 통해서 역사의 진실성은 검증받아야 한다.

영화 ‘건국전쟁2’는 그동안 국민들이 모르고 있던 좌익 공산주의자들의 양민 학살에 대한 증언, 남로당에 의해서 암살당한 제주11연대 사령관 박진경 대령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1949년 춘천 주둔 국군8연대 표무원, 강태무 부대의 월북 사건 등 새로운 역사적 증거를 영화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

‘제주4·3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에서 시작됐다’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CNN 기자회견 실제 영상을 발굴해낸 것도 ‘건국전쟁2’의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제주4·3사건 가해자들 재심 통해 무죄 선고
폭동 가담자 범죄행위가 피해자 둔갑 기막혀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1+1=2+α다”

대한언론 특별기획
박정희 경제기적 재조명 ④

좌승희 박사
아주대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1970년 4월 1일 포항종합제철소 기공식에서 기공 버튼을 누르는 박태준 사장, 박정희 대통령, 김학렬 경제기획원 장관(왼쪽부터).

자본주의는 기업경제라는 필자의 연구 결과(좌승희, “자본주의 선언: 자본주의 경제는 기업경제다”, 한국경제포럼, 제14권 제1호, 2021,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주류경제학은 자본주의적 기업이 부재한 고전파적 농경사회 경제학을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다. 더구나 기업 존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카를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경제도 기업이 부재한 농경사회 경제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흥미롭게도 공산·사회주의 경제의 몰락을 통해 우리는 자본주의 기업 제도를 청산한 사회주의 경제가 결국은 농경사회로 역주행하여 망할 수밖에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북한경제의 실패는 생산공장은 있지만 자본주의 기업 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그 많은 체제 전환경제 중에서도 유일하게 도약에 성공한 사회주의 시장경제 모델이라 주장하는 중국 모델은 사실상 박정희의 기업주도 자본주의 경제 모델에 무임 승차한 결과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최근의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도 결국은 양국 간의 기업전쟁임을 이해한다면 박정희의 기업육성이 기업주도 자본주의 경제발전에 대한 탁월한 통찰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민주·시장경제 체제는 아마도 이념적으로는 좋은 제도이지만 실제로는 경제발전이 쉽지 않은 제도인 반면, 박정희식 권위주의 정치·경제체제는 주류 이념으로 보면 안 좋아 보일지 모르나, 경제적 성공 가능성은 높은 체제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제 동서양의 산업혁명 역사와 20세기 후반의 세계 및 한국의 경험은 민주주의냐 독재 혹은 권위주의냐의 여부는 경제 번영의 필수적 전제가 아닐 수 있음을 강력히 암시하는 것으로, 그동안 박정희 시대 성공을 정치적 권위주의체제라 하여 폄훼해온 학계나 일반의 생각이 오류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 박정희는 정치를 어떻게 했기에 인류 경제 발전사에 길이 빛나는 최고의 동반성장 시대를 실현하였는가? 이를 밝히는 것이 이 연재의 목적이다. 민주대 독재 프레임을 벗어나 어떤 정치가 경제발전에 친화적인지를 구명하지 않고는 박정희는 물론 세계 경제발전을 제대로 이해도 설명도 할 수 없음이다. 독자들께서 그동안의 도그마를 벗어나 보다 열린 마음으로 연재를 즐길 수 있기를 염원한다.

박정희의 창발적 경제발전관: 그는 왜 경제학적 상식으론 무모한 도전을 계속했나?

1) 경제발전은 낙타의 바늘귀 통과만큼이나 어렵다.

경제학은 자본을 축적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국민 교육을 잘 시키면 시장이 알아서 경제를 발전시킨다고 한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수출을 많이 하면 된다고도 한다. 선진국들이 하는 일을 따라하면 된다고 한다. 그런데 2차 대전 이후 경제도약에 성공한 나라는 몇 나라가 안 된다. 또 민주주의하고 시장 경제하면 된다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도 별로 없다. 이미 살펴본 대로 민주주의 할수록 오히려 저성장 양극화에 빠지고 있다. 세계은행이나 IMF는 선진국들의 성공 경험을 열심히 정리하고 가르치지만 별로 성공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도 새마을운동을 전수한다고 애를 쓰는 데 도약에 성공하는 나라는 없다. 경제 발전 분야의 노벨상 경제학도 모두 경제 발전의 보편 현상은 물론 한강의 기적에 대해 무지하다. (1993년 신제도 경제학, North; 2019 실험경제, Banerjee & Duflo; 2024 민주주의·시장 경제의 포용적 성장이론, Acemoglu & Robinson 등). 그런데도 경제학계는 물론 정치인들은 경제 발전이나 성장을 아주 쉽게 얘기한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감히 주장하는데, 선진국으로의 경제적 도약은 낙타가 바늘귀 통과만큼이나 어렵다.

2) 박정희의 창발적 복잡 경제발전관: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면 텍사스에 토네이도가 일어난다.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주민들 간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마을 간의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마을 간 경쟁을 촉발하여 주민들 간의 협력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유명한 말을 남겼다: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알파’가 더해져 2보다 커진다. 즉, 1+1=2+α (α≥0)이다.” (유네스코에 등록된 새마을운동 지침, 1972년 4월 26일, 새마을 소득증진대회의 연설, 1972년 5월 18일). 이는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커질 수 있다는 것으로, 서로 다른 부분이 만나 서로 시너지를 내면 상호작용하여 비선형적으로 힘의 증폭 현상이 일어나 전체가 그 구성 부분과는 성질이 다른 조직으로 도약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최근의 복잡성 과학(Complexity Science)은 창발(emergence)이라 부른다. 비유하면 단세포에서 출발하여 세포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100조 개의 세포 덩어리가 모이면 인간이라는 고등동물로 창발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로렌츠라는 기상학자는 “남미에서 펄럭인 나비의 파장이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일으킨다 (Edward Lorenz, 1972)”는 논문을 통해, 초기의 미세한 변화가 상상하기 어려운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나비효과’를 개념화하여 복잡성 과학의 태두가 되었다. 이후 이 생각은 경제 현상 또한 복잡계 현상으로서 경제의 질적, 구조적 변화 또한 창발현상이라고 보는 복잡계 경제학이 등장하였다(필자의‘경제 발전의 일반이론’). 놀랍게도 50여년 전, 박 대통령은 복잡성과학의 개념이 정립되기도 전에 협동의 시너지가 창발적 발전을 이끈다는 복잡계적 사상을 가지고 새마을운동을 시작하여 10여년 만에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박 대통령은 이미 1968년에 이러한 사상을 예견하고 있었다. 1968년 9월 11일, 서울~부산 고속도로 대구~부산 구간 착공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일본의 가모 노 초메이(Kamo no Chōmei)의 수필집 ‘방장기’(1212)를 인용하며 비유적으로 고속도로 시스템이 나비효과를 통해 한국경제의 창발을 가져올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바람이 불면 쌀 뒤주 만드는 사람이 수지맞는다… 바람은 흙먼지를 일으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맹인의 수가 늘어나면, 그들은 생계를 위해 샤미센(우리나라의 해금)을 연주해야 하므로 사미센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샤미센은 고양이 가죽으로 만들기 때문에 고양이 도살이 늘어나게 될 것이므로, 쥐의 수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제 늘어난 쥐가 곡식에 축을 낼 것이니 이를 막기 위해 뒤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뒤주 장사가 돈을 벌게 된다.” 이는 박 대통령이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 프로젝트가 상상을 초월하는 연쇄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해 창발적 경제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이미 나비효과와 같은 복잡성 과학 원리를 예견한 그의 통찰을 반영한다.

박 대통령의 창발적 경제 발전 철학의 또 다른 강력한 구현은 1973년 1월 12일에 발표된 중화학공업화(HCI) 정책이었다. 기존의 장기 경제발전계획(1972~1981)은 기존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계량 경제학적 예측을 통해 1981년까지 53억 달러의 수출을 전망했으나, 박 대통령은 1971년 10억 달러에서 1981년까지 거의 10배, 그리고 기존 정부 계획 목표의 두 배에 달하는 100억 달러의 수출 증가와 1인당 소득을 1,000달러로 두 배 이상 늘리는 야심 찬 목표를 발표했다.

대한언론 특별기획 근현대사 실록 ㉞

“똑똑한 국민탄생…죽어도 여한이 없다”

흔히 이승만을 평가하는 말로 ‘공7과3’을 꺼낸다. 이승만대통령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는 연구자들조차 ‘말년의 과오’라며 “종신집권은 노욕(老慾)”이라 지적하고, 그로 인한 3·15부정선거와 4·19 하야를 거론한다. 틀린 말이다. 당시의 국내외 정세에 대한 연구부족을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다. 과연 그것이 노욕이 빚은 개인적 권력욕이었던가?

대한민국 國父 이승만

35) ‘종신집권’ & 4·19

◆사사오입 개헌때 ‘이승만 종신집권’ 조항은 여야합의 사항이었다.

1954년 11월 ‘변칙’ 확정된 제2차 개헌의 주요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확립과 국무총리제 철폐 등이다. 이때 “건국대통령에 한해 임기제한(2기연임)을 없애자”는 여당의 제안을 야당도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당시 한·미동맹을 체결하고 미국의 대규모 원조체제를 확보한 이승만의 카리스마를 대체할 지도자가 없음을 야당도 인정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개헌찬성에 ‘1표’가 모자란 결과를 사사오입시킨 자유당에 야당이 들고 일어난 것, 막후 협상의 합의를 외면한채 ‘반독재 투쟁’에 돌입했던 것이었다. 이승만이 미국식 ‘동일티켓 출마’를 권해도 야당은 유일한 집권찬스 ‘부통령 직선제’를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민주당, ‘부통령 직선제’ 고수…조봉암의 급부상에 파란.

1952년 1차개헌(부산정치파동)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한 이승만은 야당이 고집하는 ‘부통령직선제’까지 막지 못했다. 1956년 실시한 대선때 이승만은 개헌에 따라 3선에 출마했고, 민주당의 신익희 후보가 유세중 돌연 급사하자 진보당 조봉암이 어부지리로 대거 득표한다. 이에 ‘포스트 이승만’을 노리는 민주당은 조봉암 세력과 연합하게 됨으로써 자유당은 뜻밖의 위기에 몰렸다. 여기서 등장한 것이 최인규 내무부장관의 조직적인 3·15 부정선거였다. 자유당 강경파는 “이러다가 공산당 대통령이 나와도 좋다는 말인가. 이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뭉쳤다. 휴전후 북한의 ‘평화통일’ 공세에 조봉암이 연계되어 김일성과 내통한 증거가 줄줄이 나왔기 때문이다. 조봉암은 1959년 7월31일 사형된다. ‘사법살인’이라고? 아니다. 포성은 멎었지만 6·25전쟁은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승만, 4·19 일주일 전 각의에서 ‘대통령 사퇴’를 말하다.

1960년 3월15일 제4대 정·부통령 선거. 이번에도 민주당후보 조병옥이 미국가서 위암수술후 급사한다. 단일후보 이승만 당선, ‘부통령 이기붕과 장면의 사생결단’으로 변했다. 투개표 당일부터 부정선거가 일으킨 전국 유혈사태, 4월11일 마산 앞바다에서 고교생 김주열의 최루탄 시신이 발견된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이승만이 호령한다.

“어린 아이를 죽여놓고 무슨 공산당 핑계야, 대통령이 사직해야 해결될 것이니 수습방안을 강구하라” 대통령 사퇴후의 대책을 요구하였다.

다음주 4월19일, 서울이 폭발하고 경무대앞 발포로 1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사태는 수습불능, 그제서야 김정렬 국방 등 일부 각료가 이실직고, 이승만은 망연자실이다.

“부정을 왜 해? 어떻게 경찰이 국민들을 쏠 수가 있어? 내가 그만두면 희생자는 없겠지.”

서울대 병원으로 부상자를 위문한 이승만이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젊은이들이 장하다. 부정을 보고 일어서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지. 내가 맞을 총알을 학생들이 맞았어”

이화장에 돌아와 시민들에게 “놀러들 오시오” 손을 흔드는 이승만. 오른쪽 벽보는 이화장에 몰려온 시민들이 써서 담장에 붙인 것.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은 사퇴해야 한다” 마지막 민주화 원칙 선언!

마침내 4월26일 아침 10시, KBS 방송이 “이대통령 사퇴”를 발표하자 전국이 만세를 부른다.

이승만은 사퇴성명을 내기전 며칠간 후배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내각을 구성했다. 독립운동시절부터 사랑한 후배 허정은 신실한 자유민주주의자였다. 자신의 사퇴후 야당의 내각제 정부가 들어서도 안되고, 혹여 공산당 독재자가 나타나도 안되기 때문이다. 평생을 바쳐 천신만고 끝에 창조해낸 자유민주 헌법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수호해야 한다.

이승만의 사퇴소식을 접한 여야의 원들이 달려와 만류하였다. “창피해, 나라가 창피해”를 연발하는 이승만은 사퇴성명도 직접 자신이 구술한다.

그가 밝힌 성명의 첫 번째가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은 사퇴해야 한다”였다. 마지막까지 민주화의 원칙 ‘민의존중’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떠난 것이다.

4월28일 아침, 이기붕 국회의장 일족이 대통령 양자 이강석의 총탄에 집단자살한 그날, 이승만은 경무대를 나선다. “나는 사직했으니 대통령차를 탈 수 없다. 이화장까지 걸어서 가겠다” 측근들이 강제로 관용차에 태워 ‘통치12년’을 마감하고 평민으로 돌아갔다.

◆“나를 위로하지 마시오. 똑똑한 국민이 있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소”.

이화장 담벽엔 ‘여생을 평안히’ ‘만수무강’ 등 벽보들이 붙고 통곡하는 시민들은 “자유당 놈들이 우리 대통령을 망쳤다”며 땅을 치는 것이었다.

야당, 부통령 직선제 담보로 ‘종신집권’ 개헌 합의
“국민이 원하면 사퇴” 민주화 원칙 보여준 ‘자진 하야’

대한신문 기자였던 필자는 민심의 현장에서 착잡해졌다. 뒷날 밝혀진 사실, 대만의 장제스가 보낸 위로 편지에 이승만은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고 한다. “나는 위로받을 이유가 없소, 똑똑한 국민이 있으니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으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소.”

★마침내 이승만은 성공하였다. 20세때 배재학당에서 처음 발견한 자유의 유토피아 미국, “정치는 백성의 수준에 달려있음”(‘독립정신’)을 절감한 이승만은 “미국과 동등한 국민국가” 만들기에 전력을 바쳤다. 공산당의 완전축출과 자유통일을 위한 ‘종신집권’이었지만 ‘똑똑한 국민’의 탄생을 발견하자 평생목표 달성을 확인! 4·19는 그의 마지막 성공이 아니랴. 인류사에 제발로 걸어나가는 독재자는 없다.

인보길(전 조선일보 편집국장 ·현 뉴데일리 회장)

특파원 수첩 런던 ⑦

피랍 사흘 뒤 도재승서기관 사진 등장

타임지 커버 들고 초췌한 모습…납치 주장 세곳

박창래
전 동아일보 런던특파원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표이사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외교관 납치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난 1986년 1월 31일, 아침 8시 10분. 이곳 대사관 2등 서기관 도재승(都在承)이 출근하려는 순간, 돌연 나타난 검은 색 복면을 쓰고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정체불명의 괴한 4명이 도 서기관의 푸조 승용차를 가로막고 검박, 포박한 뒤 자기들 벤츠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유유히 사라진 것이다. 그들은 대사관 차의 키를 빼앗고 오른쪽 앞바퀴에 기관총을 난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뒤 달아났다. 대사관 입구까지 20여m를 앞두고 좌회전을 시도하려는 순간 길 양쪽에 기다리고 있던 괴한들이 순식간에 벌인 납치극이다.

그렇게 도재승 서기관이 납치된 이후 그의 생사는 물론 행방이나 범인의 소속 단체, 납치 동기 등 아무 소식도 없이, 하루하루 긴장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서울 외무부 본부는 물론 이곳 대사관이 노심초사, 신경이 곤두세워져 있는 가운데 갑자기 나타난 사진은 도 서기관의 상반신 모습이었다. 1986년 2월 3일, 그러니까 피랍된 지 사흘 뒤 등장한 이 사진은 그가 두 손으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최신호 (2월 3일자) 커버를 앞가슴에 들고, 벽을 등진 채 서 있는 모습. 수염을 깎지 못해 덥수룩하고 머리도 헝클어진 채 긴장 속 초췌함과 피곤함이 역력했다. 대사관은 아연 긴장하면서도 기대감을 부풀렸다. 살아 있다는 증거이며 협상의 여지를 보았기 때문.

이 사진을 보낸 곳은 자칭 '투쟁 혁명 세포' (Fighting Revolutionary Cells). 레바논 정부나 우리 외무부도 처음 들어본 생소한 단체였다. 이 단체는 도재승을 자기네들이 납치, 억류하고 있다는 성명과 함께 사진을 AFP통신사 베이루트 지국에 보내왔다. 성명과 함께 동봉된 사진은 가로 세로 8 cm크기의, 아주 조악한 컬러 폴라로이드 사진. 통신사 우편함에 누가 넣어 놓은 것을 AFP 측에서 한국 대사관에 전달한 것이었다. AFP에 보낸 것은 레바논이 과거 프랑스 식민지이었고 프랑스 통신사로서 아랍권 뉴스를 비교적 상세히 보도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투쟁 혁명 세포', 요구 안 들어주면 "없애버리겠다"

이 단체는 아랍어로 타이핑되어 있는 성명에서 "우리가 추후 발표할 모든 요구를 충족시켜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만일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도재승을 "없애버리겠다"고 위협했다. '투쟁 혁명 세포' 조직이 이 사진을 보내온 것은 자신들의 소행임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연락창구는 물론 정체조차 알 수 없었다.

이로써 도 서기관 납치를 주장 한 단체는 셋으로 늘어났다. 이보다 앞서 '세상의 억압 받는 자'(알무스타드아핀 니 알 알람), 녹색여단 (Green Brigades)등이 자기들 소행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녹색여단 소속 괴한들은 '고국의 소리' 라디오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10일까지 1,000만 달러를 보내주지 않으면 또 다시 폭력을 사용하겠다고 협박한 일이 있다. 사건 바로 다음 날에는 한 기독교계 방송이 친 이란계 회교 과격파인 헤즈볼라 (神의 당)의 소행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으레 그렇듯이 북한 관련설도 등장했다.

'아무나'를 납치해도 '아무'도 모를 치안 부재

납치했다고 주장하는 조직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이 나라의 치안이 불안하다는 증거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과격 테러 조직이 무려 20여개, 대부분 4~5명으로 조직된 정예부대이다. 나는 사진이 발견된 AFP 베이루트지국을 찾아갔으나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 그들이라고 무슨 정보를 가지고 있을 턱이 없다. 그저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 (AFP 특파원 페트릭)뿐. "아무나를 아무데로나 납치해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진단 (영국 가디언 지의 베이루트 특파원 라히르)은 치안 부재상태를 실감 있게 전한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 모두가 밤이면 권총을 휴대하고 해가 진 이후에는 외출을 일절 삼가고 있다. 사건 발생이후 서울에서 날아온 특파원들도 대사관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도록 종용받았다.

지난 1975년 내전 시작이후 지금까지 200여건의 크고 작은 납치사건이 발생한 사실은 이 기자들의 말이 과장이 아님을 증명한다. 이들 중 일부는 피살되고 일부는 석방되었으나, 지금까지 풀려나지 못한 외국 언론인 및 외교관은 프랑스 4명을 비롯해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등 모두 15명. 그러나 풀려났다 하더라도 그 경위 또한 철저한 베일에 감춰져 있다. 범인의 정체나 배후, 석방 대가 등은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그들 조직의 복잡함과 무서운 보복 때문이다. 마치 첩보영화의 공작원 접선이나 테러 영화 장면 그대로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를 찾아내려는 우리 외교부의 노력은 끈질기게 계속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방은 오리무중, 교섭은 장기전으로 돌입했다.

등골이 오싹한 격전의 현장, '그린 라인' 현지 르포

나는 그들이 외교교섭을 벌이는 동안 기자의 호기심이 발동, 전쟁의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그린 라인'을 돌아보았다. 그린 라인 (녹색선)은 혁명정신으로 무장된 회교, 기독교 등 종교 각파의 민병대원들이 서로 자기 영역 확장을 위해 얼굴을 숨긴 채 총구를 겨누고 있는 곳. 베이루트를 동서로 가르는 '엘코리 베차라'거리를 따라 남북으로는 10km에 달하지만 그 폭은 길 하나를 두고 대치하고 있을 뿐, 가장 넓은 곳도 지형지물에 따라 1Km 떨어진 것이 고작이다. 긴장감에 숨이 막히는 곳, 공포감에 등골이 오싹한 그 곳을 안내원을 고용하여 1시간 남짓 취재하고 돌아오니 녹초가 되었다. 르포 기사를 작성했으나 통신시설의 파괴로 서울 본사로 바로 보낼 길이 없어 런던에 있는 아내에게 어렵사리 전화로 불러주면 아내가 이를 받아 팩스로 본사에 송고토록 했다.

그러나 도재승의 색출 작전은 계속 암중모색, 진전이 없다. 나는 더 이상 현장 취재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 런던으로 귀임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 죽음의 도시를 벗어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 최초의 외교관 피랍사건으로 기록된 도 서기관의 행방을 전혀 모른 채 납치 현장을 떠나는 마음은 무거웠다.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이는 베이루트는 '중동의 파리', '아랍의 진주'라는 별명처럼 저렇게 아름답고 평화로운데 도 서기관은 지금 도대체 어디서 얼마나 고초를 당하고 있을까.

레바논 치안불안 납치사건 200여회 발생
외교부, 색출 교섭에 도 서기관 행방 묘연

이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사진' 조작

총 5건 불공정 보도-언론 무관심 '눈살'

대한언론 공정보도심의위원회 11차 회의

대한언론인회 공정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20일 오전 대한언론인회 회의실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5건의 신문·방송 보도 내용을 불공정 보도로 선정해 그 내용을 '대한언론' 11월호에 보도키로 의결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할 때 기립박수를 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오른쪽 앞에서 둘째 줄 위성락 안보실장 등 한국 관계자들만 앉아서 박수를 치고 있다.

◆서옥식 위원 : ▲MBC는 이재명 대통령의 2025년 9월 24일(현지시간) 유엔연설이 끝나자 연설장 참석자들이 일제히 기립박스를 쳤다고 25일 허위 보도했다. MBC는 이날 〈유엔총회에서 기립박수와 우렁찬 박수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이란 제목의 뉴스에서 이같이 전했다. 텅텅 빈 객석인데도 촬영 앵글을 바꿔 사람이 많은 것처럼 조작하고, 심지어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까지도 앉아서 박수를 쳤는데도 거짓으로 허위 보도했다. 광우병 조작보도 등 그동안 온갖 허위조작 보도를 통해 종북좌파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해온 언론이 MBC 아닌가?

▲일부 친 이재명계 유튜브 방송은 이재명이 세계 지도자 190명 앞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역대급으로 높이고 뉴욕의 밤을 주도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세계적인 뉴스통신사인 로이터(영국), AP, 블룸버그(이상 미국), AFP(프랑스), 교도(일본), dpa(독일), ANSA(이탈리아)와 세계적인 방송사인 BBC(영국), CNN, ABC, CBS, NBC(이상 미국), NHK(일본), 세계적인 신문인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이상 미국), 더 타임스, 파이낸셜 타임스(이상 영국), 르몽드(프랑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해도 이대통령이 유엔총회를 주도하고 압도했다는 보도를 한 적이 결코 없다. 심지어 이재명대통령과 친하다는 중국이나 러시아 언론도 유엔총회 기간 중 이 대통령을 추켜세운 보도를 한 적이 없다.

종편 MBN도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과 관련, 다소 황당한 뉴스를 보도했다. MBN은 뉴욕 특파원 발 아닌 서울발 김모 기자 보도에서 이 대통령이 연설 도중 한국의 국제사회 복귀 선언과 대북 적대행위 중단 발언을 할 때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MBN은 느닷없이 이 대통령이 '한국의 유엔 복귀선언'을 했는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이 유엔에서 탈퇴했다가 복귀했다는 뜻으로 들리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2025년 8월 25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이 공동기자회견이나 공동 합의문, 공동 언론발표문 없이 끝난 데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미국 워싱턴D.C. 프레스센터 내 중앙기자실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공동 합의문을 서로 얘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기분 좋게 마무리됐다"며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얘기가 잘 된 회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후 한·미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아무런 진전이 없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9월 22일자로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의 회견(회견 일자는 9월 19일)에서 "한·미 통화 스와프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 달러를 인출해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합의문을 만들 필요없이 잘 됐다는 자화자찬은 어디로 가고 없는가?

환율-주식 분석 외면에 투자자들 분노
일부 국감장 국회 파행 운영 축소 보도

◆조희곤 위원 : 비상식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환율과 주식시장에 대한 언론의 무관심에 가까운 태도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1400만 명이나 되는 주식 투자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평가다. 언론은 입법 행정 사법에 이은 '제4부'요, '무관제왕'이니 '사회목탁'이니 하는 찬사가 부끄럽다.

요즘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이미 1400원대를 훌쩍 넘어 1450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긴 추석연휴 동안 이어진 글로벌 달러 강세 현상이 한꺼번에 반영된 데다, 미·중 무역 갈등이 재 점화되면서 외환시장에 변동성이 커진 탓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국내 주식시장까지 덩달아 상승하고 있다. 그냥 상승이 아니라 거의 매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폭등세의 연출이다. 경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 할 수밖에 없다. 보통 환율이 상승하면 주가는 하락하는 것이 상식처럼 돼있다. 상식적이지 않게 환율 상승 속에 주식시장은 고공행진을 지속, 투자자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도 대부분의 언론은 이에 대한 가이드성 해설기사조차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 환율이나 주식시장에 대한 언론의 사실상 '방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래서야 공정보도라 말할 수 있겠는가.

◆심상대 위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수적 우세를 앞세운 민주당의 밀어붙이기 국회 운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파행으로 치달았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와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가 특히 심했는데 위원장의 횡포로 "국감이 개인 분풀이, 정치 보복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민희 위원장의 경우 MBC가 자신에 대한 뉴스 보도에서 편파적이었다며 국감장에 나와 있던 MBC 보도본부장을 직권 퇴장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 보도본부장은 개별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감정을 드러낸 것이다. 이같은 태도는 명백하고도 심각한 언론자유 침해 행위로 언론계는 결코 좌시해서는 안되는데 일부 언론은 이를 아예 다루지 않거나 축소 보도하는 비겁함을 보였다.

〈정리 : 이규진 총괄부회장〉

꽉 막혔던 한미 관세협상 극적 타결

경제 포커스

투자액 2,000억달러 현금 1,500억달러 조선업협력 펀드

조희곤
본회 편집위원
전 내외경제 논설위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백악관에서 새 관세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한·미 관세협상이 극적 타결됐다. 전체 투자액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고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펀드로 구성하기로 했다.

'3500억 달러'가 논쟁의 핵심…조달 방식에 이견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금 조달방식이었다.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를 투자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한국이 받아들인 것. 일본은 5500억 달러(약 787조 원) 투자 중 상당액을 현금으로 충당하며 미국과 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한국은 외환 보유액이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투자 구조상 현금 부담이 커 난색을 보였었다. 미국은 최근 한국 정부에 3500억 달러 규모의 직접 투자를 요구한데 이어 '선불(up front)' 조건을 요구하고, 투자액 증액까지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해 '그것은 선불'이라고 못 박았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투자 규모를 (일본처럼)5500억 달러까지 늘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우리정부 무제한 통화스와프 요구…미국은 사실상 거절

우리 정부는 외환 시장의 충격을 막기 위해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며 배수진을 쳤다. 이런 배경에는 미국의 요구가 단순 보증이나 대출이 아닌 '현금 투자'라는데 기인하고 있다. 막대한 현금이 단기간에 빠져 나갈 경우 외환 시장 변동성이 커질 위험에 직면하기 때문이란 판단에서다. 그러나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미국은 과거 경제 위기 상황을 제외하고 비 기축 통화국과 상설 통화스와프를 맺은 전례가 없다. 미국은 이미 우리 측의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에게 통화스와프를 해주면 미국 입장에서는 관례가 돼 다른 나라에도 문호를 개방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설령 통화스와프가 체결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시장의 패닉을 막는 응급수단일 뿐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화스와프는 또한 만기가 되면 이자를 붙여 상환해야 하는 대출이어서 이 역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3500억 달러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8월말 현재 4163억 달러)의 84% 이자, 한해 예산(673조 3000억 원)의 약 19%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규모다. 통화스와프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막대한 현금이 빠져 나가면 금융시장은 요동칠 수밖에 없다. 3500억 달러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국부가 유출되는 것은 물론, 국내 유동성이 흡수돼 시장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또한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를 위축시켜 실물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여러가지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미국의 요구는 실현 불가능한 수준이란 평가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요구한 투자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아마 (나는) 탄핵 당했을 것"이라고 언급했을 정도다. 일본도 2029년까지 나눠서 투자하라는데 한국은 한꺼번에, 그것도 현금으로 내라는데 대한 불만으로 읽혀졌다.

한국만 25% 자동차 관세…현대·기아차 매달 수천억 원 추가 부담

현재 한국 자동차는 '나홀로 25%' 관세폭탄에 신음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9월부터 일본산 자동차는 15%(대형 트럭은 25%) 관세를, 유럽산은 8월1일부터 15% 관세를 소급 적용받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 차만 고율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가격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25% 관세에 따라 현대차는 4000억 원, 기아차는 3000억 원을 매달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양사의 영업이익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정보업체인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은 현대차 2조6747억 원, 기아차 2조409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3%, 16.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4분기 실적이 더 악화될 것이란 점이다. 일본이나 유럽과 관세 역전 상황으로 인한 타격을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는 시점이 4분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차는 관세에 따른 가격인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호세무뇨스 미국 현대차 사장은 최근 "비용은 비용, 매출은 매출"이라고 선을 그었다. 관세 때문에 가격을 올리면 매출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탁월한 가치, 품질, 혁신을 제공하면 고객들은 그에 반응한다"고 덧붙였다.

우리국민 80%가 "미국 요구 부당" 한목소리

이런 가운데, 한국 시민사회를 비롯한 민간 차원에서도 미국에 대한 규탄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외교전문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외교광장'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에 350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그것도 선불로 투자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이게 과연 투자인가, 공갈인가"라며 "동맹의 이름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것은 외교가 아니다. 약탈이며 주권국가에 대한 모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국민들도 대부분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국민 중 8명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3500억 달러 선불 요구가 부당하다고 여긴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최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안 조사 결과 '부당하다'는 응답은 80.1%에 달했다. 반면 '수용 가능하다'는 응답은 12.4%에 그쳤다. 리얼미터측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80%를 넘어섰다는 것은 최근 한국인 구금사태와 맞물려 '협박성 요구'로 인식된 결과"라며 "국민의 국익 보호 의식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미국인들도 한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행태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다,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찬성한다는 미국인들의 응답은 10%에 불과하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미국인 10명 중 7명(68%)은 한국과의 교역이 미국에 이익이 된다고 응답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관계 대응에 대한 미국내 지지율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최근 공개한 '미국의 한반도·동북아 외교정책에 대한 미국인들의 태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미관계에 있어 현 미국 행정부의 대응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3.5%로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이 수치는 2020년 38.1%를 기록한 이후 매년 상승해 지난해 48.5%까지 올랐으나, 한해 만에 무려 15%포인트 가량이 내렸다.

자동차 관세 15%인하…의약품 최혜국 대우

〈13면에 계속〉

트럼프 '反이민정책'에 조지아주 '발등의 불'

美대법원 '상호관계 위법 심리' 따라 변수 많아

〈12면에 이어서〉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협상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은 거액의 지불금을 서명 보너스(signing bonus)로, 피터 나바로 무역 고문은 백지수표(blank check)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국가안보 주권기금(national security sovereign fund)으로까지 표현했다"면서 "이런 표현 방식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국민에게 관세 협상을 설득하기가 더 어려워졌을 것" 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 매체는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조지아주 현대-LG배터리 공장을 급습, 수백 명의 한국인을 구금한 것이 한국 국민의 여론을 악화시키는 악재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이럴 바엔 한국처럼 버텨야 했을 것" 자성론 대두

서둘러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일본은 후회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백기를 들었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다. 5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현금을 미국에 바치면서도 15%의 관세까지 떠안게 된 일본의 모습은 한국에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

일본은 현금도 빼앗기고 관세도 물게 되는 이중고를 당했고, 자동차 업계만으로도 연간 25조 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럴 바에야 한국처럼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어야 하는 것 아니었냐는 자성론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세협상에서 5500억 달러를 챙겼다"는 보도에 대해 "실제 투자 금액은 5500억 달러의 1~2%에 불과하다"는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일본의 5500달러 투자설'을 흘린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낳게 하고 있다. '1~2% 불과설'을 주장한 주인공은 미·일간 무역협상을 주도했던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경제재생상이다.

그는 최근 외국 특파원협회(FCCJ) 강연에서 "5500억 달러 투자 약속과 관련해 실제 투자 금액은 1~2%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대출 및 대출 보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오른쪽)이 지난 3월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준공식에서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현대차그룹 제공〉

미 조지아주 근로자 구금사태 후폭풍…주지사 급거 현대차 면담 요청

ICE가 전대미문의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을 집단 구금한 사태 여파로 문제가 발생했던 미 조자아주가 후폭풍에 휩싸였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급작스레 한국 방문을 추진하며 현대자동차 경영진과의 긴급 면담을 요청한 것이다. 현대차 그룹은 조지아주에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CMA)를 건설하며 총 110억 달러(약 15조7000억 원)를 투자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27억 달러(약 3조8000억원)를 추가 투자, 30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터였다. 또 현재 3129명의 현지 직원을 고용중인 공장은 2028년까지 고용 규모를 850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런 현대차의 계획이 대규모 근로자 구금 사태로 불투명해졌다. 켐프 주지사가 방한을 서둘러 결정한 배경이다. 구금됐다 풀려나 귀국한 한국 근로자들은 배터리 장비를 설치하고, 완성될 공장에서 일할 직원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줄 유일한 사람들인데 구금사태로 일이 꼬여가고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트럼프 대통령 정치의 핵심은 제조업 부활과 반이민 정책인데, 이는 본질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제조업을 살리려면 외국 기술과 노동력이 필요하지만, 이는 결국 반 이민 정책과 상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합법적으로 할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가 곧바로 "우리는 외국 기술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이를 잘 말해 준다. 숙련공 양성에는 시간이 걸리고, 결국 외국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 모순은 앞으로도 반복 수 있다는 진단이다.

연말쯤 미 대법원서 상호관세 위법 여부 결론 날듯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미 연방 대법원의 심리 결과가 금년 말쯤 나올 것으로 예측되면서 각국의 시선이 이곳으로 쏠리게 됐다. 이 심리는 단순한 법적 판결의 의미를 넘어 전 세계 무역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대법원이 일부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더라도 미국은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미 대법원은 오는 5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근거로 단행한 관세 조치에 대한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협상이 다시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대법원이 행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면 백악관은 입법·행정 수단을 탐색할 것이고, 반대로 권한을 인정하면 국제무대에서 재협상이 봇물을 이룰 수도 있다. 산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전 세계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상황을 살피면서 다른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들이 안심하기엔 이르다"고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워낙 다양해 설령 위법 판결이 나와도 우회로를 통한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대표적 인사는 제시 크라이어 조지타운대 법학교수다. 그는 최근 열린 한·미 의회교류센터 세미나에서 "전 세계와의 무역관계를 바꾸겠다고 마음먹은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무역확장법 232조를 예로 들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통해 자동차와 철강 등에 품목관세를 이미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품목의 제한할 권리를 대통령에게 주고 있는데 근거하고 있다.

국익중심 타결이 최선…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협상 임해야

현재도 관세 여파로 대미 일평균 수출이 16.4%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기업들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을 제공하는 것보다 차라리 25% 관세를 받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의견을 개진한 대표적 인물이 미국의 경제학자 디 베이커다. 그는 "한국은 연간 125억 달러(약 18조원) 규모의 상품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 3500억 달러를 내줘야 하는가"라며 3500억 달러 투자에 반대했다. 딘 베이커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공동 설립자이기도 한 그는 최근 이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한 칼럼에서 "한국이 미국에 수천억 달러를 건네기보다는 (25%의 관세를 받고) 그 돈의 20분의 1로 자국 내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쪽이 낫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행정부에 큰돈을 내느니 차라리 관세 인상을 감수하고, 국내 보조금을 늘리라고 권유한 것이다. 이번 대미 관세협상은 단순한 협상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의 생사가 걸려있는 중대사다. 차제에 한국 외교·안보 전략이 근본에서 재점검돼야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급한 타결이 아니라 국익중심의 협상이다. 국익을 훼손하면서까지 급하게 사인(sign)할 사안이 아님은 분명하다. 우리 정부가 최근 제시한 관세협상 수정안을 미국이 일부 수용했다는 소식도 들리는 만큼 현재로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반도체·조선·배터리·바이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나라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협상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반도체·조선강국' 앞세워 차분한 관세협상을

인천공항 운서역앞

성파타워(신축) 급 매각/통 임대

급매 180억원

통 임대(우량 임차사 장기계약)

별도 문의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경제자유구역
대지면적	880.9㎡(266.47평)
연 면 적	6.265.79㎡(1.895.40평)
건축면적	523.2㎡(158.27평)
건물규모	지상 10, 지하 2층
주차대수	자주식 28대, 기계식 18대
승 강 기	승용 2개

인천공항 관련 물류, 항공, 바이오, 리조트 연계

업무시설 및 사옥, 관공서, 병원, 숙박, 수익형 등 추천

(2024년 6월 평가)

감정평가 가격 200억 보다 10% 낮은 급매

- 영종도 중심 상업지 (인천공항, 영종하늘도시의 배후 중심상업지 공항철도 운서역 2번 출구 도보 3분)
- 제3연륙교 개통 임박 (25년 하반기)
- 첨단 복합 항공단지 착공 (26년 2월 완공)
- 바이오 특화 단지 지정 확정
- 인스파이어리조트, 파라다이스씨티 등 대형 리조트 개장
- 반도체 첨단 산업단지, UAM(Urban Air Mobility)조성

2026년 1월 인천시 영종구청 개청

분양/임대 문의 **010-3238-0221**

(주)스타힐스 인천시 중구 운서동 3091-10

체육인들 조기은퇴에 무직 '이중고'

스포츠 코너

대한체육회 '체육인 은퇴 후' 진로현황

국내 체육인들의 평균 은퇴 시점은 20대 초반인 것으로 분석됐다. 은퇴 후 10명 중 4명은 사실상 직업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한체육회가 발표한 '체육인 은퇴 후 진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운동선수의 평균 은퇴 연령은 23.6세다.

이 자료에는 지난해 기준 선수 경력자(은퇴선수)가 7,52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은퇴 후 스포츠 관련 분야로 전직하는 비율은 38.4%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무직 상태 비율 역시 38.19%에 달했다.

체육인들의 은퇴 후 진로에 대한 지원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도 진로지원센터 취업 관련 상담 건수는 4,015건으로 나타났지만, 실태조사에선 진로지원센터 이용률이 불과 25.21%에 그쳤다. 미참여 사유로는 '어떻게 참여하는지 몰라서'가 1위(64.41%)로 나타났다.

운동선수들이 조기은퇴와 은퇴후 무직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사진=연합뉴스제공)

평균 23세 은퇴…무직상태 38%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체육인들은 이른 나이에 은퇴를 맞지만,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라며 "평균 23세에 선수생활을 마감한 청년 10명 중 4명이 무직 상태로 남는 현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성선수들에겐 출산 육아로 성차별 문화

이 관계자는 또 "여성 은퇴선수들은 재취업 시 출산, 육아 문제와 체육계 내 성차별 문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수립 역시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제 취업 이후에도 월평균 소득 300만 원 미만을 받는 남성은 74.1%이지만 여성은 85.13%로 성별 임금 격차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체육인에 대한 성차별적 환경은 곧 여성 인재의 성장을 가로막는 유리 천장으로, 경력 단절 예방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별도의 여성체육인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종세(본회 부회장·전 동아일보 체육부장)

'골든보이' 이강인 "떠날까, 남을까"

유럽 빅클럽 거액 제시 '구애작전'

'떠날까, 남을까''골든보이' 이강인(24·파리 생제르맹 PSG)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다. 이강인에 대한 유럽 빅리그 팀들의 '구애'가 이어지는 가운데 PSG는 그의 잔류를 위해 재계약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이다.

프랑스 유력지 '르파리지앵'은 최근"PSG가 이강인과 곤살로 하무스, 우스만 뎀벨레, 브래들리 바르콜라, 파비안 루이스 등과 계약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수주일 안에 선수 측과 구단측이 깊은 대화를 나눌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2023년 여름 마요르카(스페인)를 떠나 PSG 유니폼을 입은 이강인의 계약기간은 2028년 6월까지로, 2년 이상 남았다. 그럼에도 이처럼 계약 연장을 서두르는 이유는 유럽 내 다른 팀들의 관심을 차단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사실 이강인은 올해 초부터 이적설이 끊이질 않았다. 수많은 유럽 빅리그, 빅클럽들이 구애의 손짓을 보냈다. 아스널과 토트넘, 뉴캐슬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애스턴 빌라, 크리스털 팰리스, 노팅엄 포레스트(이상 잉글랜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비야레알(이상 스페인), 유벤투스, 나폴리(이상 이탈리아) 등이 관심을 보였다.

예상이적료 현재 몸값 16.5배인 990억 예상

이적료는 이강인 현재 몸값(약 60억 원)의 16.5배에 이를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노팅엄은 6,000만 유로(약 990억 원), 애스턴 빌라는 5,000만 파운드(약 950억 원)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 선수 몸값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트란스퍼마르크트'가 매긴 이강인의 시장가치가 2,500만 유로(약 414억 원)라는 점을 감안해도 엄청난 금액이다. 그러나 PSG의 입장은 단호하다. 엄청난 제안이 와도 'NFS(NOT FOR SALE·판매 불가)'를 반복할 뿐이다. 산유국 카타르의 자금이 유입된 PSG는 돈이 급하지 않다.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타이틀을 지키기 위한 전력 유지가 최우선이다. 물론 이강인도 재계약 협상 과정에서 매력적인 제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그의 연봉은 364만 유로(약 60억 원) 선으로 추정되는데, 이보다 훨씬 높은 대우를 보장받을 전망이다.

이강인, 계약금보다는 출전 시간에 관심

PSG가 이강인을 붙잡으려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골키퍼와 수비라인을 제외한 모든 포지션에서 일정 수준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격 2선 전지역부터 필요하면 중앙 미드필더와 최전방 공격수로도 뛸 수 있다. PSG 루이스 엔리케 감독에겐 경기 엔트리를 정할 때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카드가 이강인이다. 특히 크고 작은 부상이 속출한 요즘의 팀 사정을 보면 더욱 그렇다. 다만 고민은 필요하다. 이강인은 계약 금액보다는 더 많은 출전 시간과 출전 기회를 원한다.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로테이션 멤버로 분류된 그는 이번 시즌도 대부분 교체 출전에 그쳤다. 답답한 상황이 개선되리란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대우도 재계약을 망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PSG가 숱한 러브콜을 받는 이강인과의 재계약 협상 테이블을 차릴 전망이다. 그러나 아무리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출전 시간 확대가 보장되지 않으면 재계약 협상은 난항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사진=PSG 페이스북)

“이재명 대통령 정체성의 ‘정체’ 무엇인가?”

대한언론 ‘자랑스러운 언론인’ 민족중흥회 정재호 회장 인터뷰

박현수
본회 회우

“이재명 대통령의 내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정체성의 ‘정체’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96세 고령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않은 질문에 즉석에서 논리정연하게 답변한 정재호 민족중흥회 회장은 지난 10월 14일 서울 광화문 민족중흥회 사무실에서 ‘대한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 회장은 이재명 정부의 전반적 정책 방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사법 리스크의 숲에 갇힌 이재명 좌파 세력의 내일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현 정권의 근본적 한계를 지적했다.

지난 10월 14일 서울 광화문 민족중흥회 사무실에서 ‘대한언론’과 인터뷰하고 있는 정재호 민족중흥회 회장.

> “
> ‘김현지 파동’은 이재명 대통령 도덕성에 심각한 손상 일으켜
> ”

– 이재명 정부의 ‘실용적 시장주의’ 성공을 위한 최우선 선결 조건은 무엇이라고 보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선언하며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성공을 위한 최우선 조건은 정직한 현실진단이다. 경제 정책은 공상소설이 아닌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되는 기본 방정식’에 따르는 이치가 핵심이다. 냉철한 현실을 바탕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해야 하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 실패를 감추려 통계조작을 했던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 그러나 현재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는 이념적 정체성이 오락가락하며 혼선을 빚고 있어, 경제 정책이 실용적인 효과를 포착하는 데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있다고 본다.”

– 이 대통령의 최근 정치 행보가 민심 통합보다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나.

“이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을 강조하며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현재 한국 사회는 ‘못난 정치’로 인해 분열 증후군에 사로잡혀 있다. 특히 거여(巨與)의 독주로 인해 여야 간 협치 개념이 실종되고 다수의 횡포가 정치를 독과점하고 있다. 대통령의 권력 행사는 ‘겸손한 권력’을 뜻하며 절제되어야 하지만, 본질에서 벗어난 행보는 민심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 사법 리스크의 숲에 갇힌 이재명 좌파 세력의 내일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 민주노총 출신 고용부 장관, 민간인 국방부 장관 등 ‘진영 논리를 넘나드는 인사’를 어떻게 보나.

“이재명 정권의 인사는 ‘흑묘백묘론’과 함께 주목받았지만 과유불급의 우려를 낳고 있다. 강경투쟁 노선을 추구했던 민노총 위원장 출신 노동부 장관은 산업현장의 노사 갈등을 균형있게 조정할 기대를 설익게 했다. 붉은 띠를 머리에 두르고 형형색색의 깃발은 일방적인 승리만을 쟁취하려는 태도다. 또 국방부 장관에 실전 경험이 풍부한 군 출신 대신 민간인을 앉히는 것은 초유의 일이며, 병력 절벽 등 현실을 타개할 효과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아 실망이 크다.”

– 8·15 특별사면을 어떻게 보나.

“‘권력은 아껴 쓸수록 빛난다’는 고언처럼,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공정하고 균형있게 행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번 8·15 특사는 ‘편을 가르는 데’ 초점을 맞춰 공정성을 상실했다. 특히 청소년의 순박한 욕망을 짓밟은 ‘조국의 난’ 등 입시 비리를 범한 인사를 형기 3분의 1도 채우지 않고 석방한 것은 공정시비를 낳았다.”

– ‘조희대 청문회’ 파동에서 지적된 ‘면책특권 그늘의 음모론’과 관련해, 국회 청문·조사 관행의 합법적 한계는 어디까지라고 보나.

“민주당이 사전에 예고없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 처리하며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 권력의 도덕적 우위론을 내세우며 법원을 장악하려는 욕구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합법적 한계는 삼권분립에 있다. 국회가 대법원장의 재판 과정을 심사하는 것은 권력 남용이며 국정 농단이다. 법관은 판결을 통해 말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원칙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은 상식의 파괴다. 면책특권의 그늘에 숨어 확인되지 않은 설(說)을 함부로 내뱉고 다수의 횡포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은 민주체제 붕괴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분’ 추진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방탄법’ 완성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을 보강한 ‘검수완분’(검찰수사 완전 분쇄)의 노림수는 명백히 이재명 방탄법 완성이라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이는 검찰 수사를 ‘가루처럼 잘게 부스러뜨리려는’ 무력화 경쟁으로 읽힌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얽힌 재판(대북불법송금,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정조준한 선제적 방탄 조치다. 이는 국민의 상식 수준을 업신여기는 처사다. 슬픈일이다.”

– 이 대통령의 ‘보복정치 없다’는 장담에도 불구하고 ‘내란특검’이 속도전에 올라탄 것을 어떻게 보나.

“이 대통령은 보복정치는 없다고 장담했지만, 민주당은 ‘내란·김건희·채해병’ 3개 특검의 강행 처리를 하고 있다. 특검은 본래 벼랑끝으로 내몰린 약자가 호소하는 막바지 수단이다. 그러나 의회 권력을 완벽하게 움켜쥔 집권 세력이 특검의 칼끝을 독과점하는 것은 자충수가 될 것이다.”

– ‘김현지 파장’이 대통령의 윤리적 기반에 손상을 가했다는 지적과 진실게임 행방은 어떻게 전망하나.

“‘김현지 파동’은 대통령 이재명의 도덕적 측면에 심각한 손상을 가했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다. 주요 언론은 침묵하는 가운데 유튜브 등에서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이었다. 이는 30년 세월 동안 특정 남녀가 의기투합하여 벌인 일로 개인적 차원의 문제이지만, 권력의 중심에서 국태민안과 직결되는 문제를 속임수로 엮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안갯속에 갇혀있던 진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으며, 대한민국의 권부 한 가운데서 벌어지는 진실게임이 부끄럽기 그지없다.”

– 이재명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한 입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 날 연설에서 한·미 동맹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하겠다는 모순적 발언을 했다. 전작권 전환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논의되었고, ‘주권국가가 자국 내 작전권을 타국에 의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은 감성적 차원에서 타당하다. 그러나 국내 전문가들은 ‘반대일색’이며, ‘우리 군의 대북 정찰감시 능력이 턱없이 모자란다’는 현실론적 지적이 강하다. 이 대통령의 공식 제안은 논리의 역류 현상이며, 국군통수권자로서 전문가 그룹의 진솔한 견해를 폭넓게 수용하지 않은 처사다.”

가수 남진-작곡가 박춘석-작사가 정두수

‘가슴 아프게’ 1970년대 日本서 열풍

신대남 칼럼

‘그 시절 그 노래’

〈11〉

‘가슴 아프게’로 한·일 두나라의 사랑을 받았던 가수 남진과 작곡가 박춘석.

일본에서 ‘가슴 아프게’로 선풍을 일으킨 가수 이성애.

‘가슴 아프게’의 작사가 정두수.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쓰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것을…”. 1967년, 현해탄을 사이에 둔 한·일 두 나라 국민의 가슴을 파고들었던 남진의 ‘가슴 아프게’다. 토네이도급 히트였던 이 노래는 남진을 오빠 부대의 원조로 자리매김하고 아직까지도 그를 최연장의 현역 가수로 활동하게 한 필생의 노래가 됐다. ‘가슴 아프게’는 시인 정두수가 가사를 쓰고 1960~80년대 한국 가요사를 화려하게 장식한 박춘석이 작곡 해서 남진이 노래했다. 당대의 가요 3인방이 그 무렵 한·일 국교 정상화의 분위기에 맞춰 만들어 낸 기념비적인 노래다.

1945년,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이 되고 단절됐던 한·일 교류를 풀기 위한 정상회담이 1951년에 시작됐다. 그리고 14년이 흐른 1965년에야 타결이 돼 국교 정상화가 이뤄졌다. 어수선한 감정이 수그러들기 시작한 2년 뒤, 타이밍을 맞춰 ‘가슴 아프게’가 등장해 돌풍을 일으켰다. “…해 저문 부두에서 떠나버린 연락선을/ 가슴 아프게 가슴 아프게 바라보지 않았으리/ 갈매기도 내 마음 같이 목메어 운다”라고 계속되는 노래의 1절에서부터 이별의 세월을 탄식하고 생사조차 알 수 없던 가족과 연인, 친지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가슴 아프게’ 파고 들었다.

남진의 본명은 김남진이다. 1945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나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 목포고교 시절부터 팝송을 부르고 엘비스 프레슬리의 로큰롤을 좋아했다. 영화배우가 꿈이어서 한양대 연극 영화과에 진학한다. 그리고 작곡가 한동훈을 만나 1965년 팝 스타일의 ‘서울 플레이보이’를 불렀으나 반응을 얻지 못했다.

1967년 오아시스 레코드사에서 두 번째 곡 ‘연애 0번지’를 냈지만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방송이 금지돼 실의에 빠져 낙향을 했다. 그때 남진의 어머니 장기순 여사가 음반의 끝 곡으로 실렸던 ‘울려고 내가 왔나’로 노래를 바꿔 방송을 타면서 이름을 알렸다. 그리고 바로 그 해 작곡가 박춘석을 만나 ‘가슴 아프게’를 불러 정상의 인기가수가 됐다. 하지만 1968년 해병대를 지원해 월남전의 참전용사로 2년간 가수 활동의 공백기를 가졌다. 그 시절 장기순 여사는 가끔씩 필자에게 남진의 소식을 전하고 아들 걱정을 했던 깊은 모성애의 어머니였다. 남진은 ‘가슴 아프게’ ‘님과 함께’ ‘마음이 고와야지’ ‘미워도 다시 한번’ ‘빈잔’ 그리고 장윤정과 노래한 듀엣곡 ‘당신이 좋아’에 이르기까지 레전드 가수로 현역 활동을 하고 있다.

작곡가 박춘석은 한 시대의 기라성 같은 가수들로 ‘박춘석 사단’을 구축하고 가요사에 남을 히트곡들을 양산했던 불세출의 작곡가다. 패티김, 이미자, 곽순옥, 남진, 나훈아, 하춘화, 문주란, 정훈희 등이 그의 사단으로 불리었다. 그 시절 박춘석의 곡을 받지 않으면 톱가수가 아닌 것 같은 시대였다.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같은 시적인 가사도 쓰고 영화, 연극의 음악도 만들었다.

박춘석의 본명은 박의병이다. 1930년 서울에서 조선 고무공업사를 운영하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적부터 풍금을 자유자재로 연주하고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다. 경기고를 나와 서울 음대를 다니다 경희대 영어 영문학과에 편입해 졸업했다. 1952년 미8군 쇼 무대의 피아니스트로 데뷔해 백일희의 ‘황혼의 엘레지’로 작곡을 시작하고 손인호의 ‘비내리는 호남선’이 크게 히트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 2,700여곡을 남겼다.

그는 매사에 적극적이면서도 따뜻하고 섬세했다. 필자가 기자 시절 패티김, 이미자 등을 취재할 때면 꼭 함께 와서 곡에 대한 설명을 해주던 사람이었다. 곡도 잘 쓰지만 보이지 않는 배려와 노력이 대작곡가를 만든 원천이 아니었나 싶다. 필자가 만들었던 일간스포츠의 골든디스크상 공로상,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1995년 옥관 문화훈장 등을 수상했다. 1994년 뇌졸중으로 쓰러져 2010년 3월 80세를 일기로 운명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연락선이 없었다면/ 날 두고 떠나지는 않았을 것을/ 아득히 바다 멀리 떠나가는 연락선을/ 가슴 아프게 가슴 아프게 바라보지 않았으리…” 작사가 정두수는 ‘가슴 아프게’를 한·일 두 나라의 역사적 배경에 얽힌 필연적인 이별로 보고 떠난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임을 싣고 떠난 연락선과 바다를 탄식하는 은유법을 썼다. 그 가사에 걸맞은 단순하고 애수 어린 멜로디, 기교 없는 순수한 보컬이 바다를 사이에 둔 한·일 간의 정서와 맞물려 공감을 얻었다.

한·일국교 정상화 맞춰 현해탄배경 기념비적 노래
여가수 이성애 ‘가슴 아프게’ 일본어 음반 불티

작사가 정두수는 현상 공모전에서 당선한 시인으로 정공채 시인의 동생이다. 1937년 경남 하동 출신으로 1963년 진송남의 ‘덕수궁 돌담길’로 데뷔했다. 이미자의 ‘흑산도 아가씨’, 나훈아 ‘물레방아 도는데’, 문주란 ‘공항의 이별’, 정훈희 ‘그 사람 바보야’, 은방울 자매 ‘마포 종점’ 등 3,500여 곡의 주옥 같은 노랫말을 남기고 2016년 80세의 생을 마감했다.

‘가슴 아프게’는 한·일 관계의 자존심 문제로 기자 시절의 필자와 얽힌 에피소드가 있다. 1977년 일본의 ‘미끼 프로덕션’이 ‘탑 오브 더 월드’(Top of the world)의 번안곡을 불러 한국의 카펜터스로 불리던 이성애를 초청해 ‘가슴 아프게’의 일본어 음반을 냈다. 한 마디로 ‘대박’이 났으나 갓 데뷔한 신인가수 정도로 취급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취재해 일간 스포츠에 썼다. 기사가 나가고 바로 다음 날 ‘미끼 프로덕션’의 미끼 사장이 내한해 신문사로 찾아 왔다. “바로 시정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주겠다”고 한 인터뷰기사를 내보냈다. 약속은 바로 실행됐다. ‘가슴 아프게’는 그때 이미 일본에서 K팝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었다.

기자의 혼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투어
한국기자협회
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303호

Zoom in

천년 古都 밝히는 APEC 상징 조형물

신라의 달밤 천년 고도 경주가 빛의 향연으로 곱게 물들고 있다. '연결·혁신·번영'이라는 비전을 담은 APEC 상징 조형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의 밤이 아름답게 변신한 것. 경주 천년의 역사에 첨단 기술인 3D 입체영상, 미디어아트를 접목시켜 PRS(정상급 숙소) 주변과 보문관광단지 호반 광장 일원이 경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등장했다.

신라 박혁거세 탄생의 알을 모티브로 한 조형물(높이 15m, 너비 11.5m)은 내부에선 역사와 미래의 공존, APEC 가치를 보여주는 영상 콘텐츠를 선보이고 외부에는 21개 회원국 상징 금속 조형물, LED 패널, 미디어파사드 등이 설치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명품인생

타이타닉 號 비극은 '나사 1개 결함'

'골뱅이'는 특정 소라 종을 가리키는 한국식 이름으로 쓰인다. 골뱅이나 소라나 고둥이나 그 것이 그 것인 듯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데 '골뱅이'라는 말보다는 어쩐지 '소라'가 훨씬 더 시적(詩的)으로 느껴져서 좋다. 장 콕토의 시 '내 귀는 소라껍질 먼 바다소리를 그리워 한다'의 여운 탓일 수도 있다. 이 소라를 한자로 쓰라면 어떻게 써야할까. 국어사전에 올라 있지 않다. 그래서 소라는 순수한 우리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한자 라(螺)자가 바로 소라이고 보면 소라는 '작은 소라'라는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가 생맥주를 부어 마시는 500cc 또는 1000cc짜리 용기를 흔히 '쪽끼'라고 한다. 영어로 'jug'인데 이것이 일본식 발음으로 '족키'니 '조끼'니 하는 식으로 변했다. 컵(cup)이 '고뿌'로 발음된 것과 같다. 그렇다면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말 "나사가 풀렸다"고 할 때의 나사는 어원이 무엇일까. 일본어식 표기일까.

나사는 포루투갈어 라샤(raxa)를 한자로 옮긴 것이라고 한다. 발음이 같은 소라의 '라'자를 갖다 붙인 것이 그럴듯하다. 이 나사는 나사못이라고도 한다. 엄격히 구분하자면 나사못은 끝이 뾰족한 나사다. 국어사전을 보면 나사는 "물건을 죄어 고정시키는 데 쓰는, 나선(螺旋) 모양의 홈이 나 있는 것"이라고 되어있다. 한자로는 '螺絲'라고 표기하고 있다. 나사는 바깥쪽에 달팽이 모양 즉 소라껍질 모양의 나선(螺旋)홈이 나 있는 수나사와 안쪽에 나선이 파인 암나사를 맞춰 돌려서 연결함으로써 두 개의 물체를 하나로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국가 존립 위협하는 나사들 풀려있다

그런데 별 것 아닌듯한 이 암과 수의 접합이 인류 생존의 기본이 된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이 만든 현대의 모든 기구는 바로 이 수많은 나사들의 견인력에 의해 새로운 덩어리로 탄생하기 때문이다. 영어로는 볼트(bolt)와 너트(nut)인데 볼트가 수나사다.

미처 느끼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 세상 모든 사물가운데 신의 창작을 제외한 것 들, 즉 사람이 만든 것들은 모두 볼트와 너트로 조립돼 있다. 최근엔 유인우주선을 쏘아올려 인류의 우주여행시대를 열었는데 이런 아주 정밀한 우주선을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나사들이 들어갔을까. 그 수가 너무 많아 이 중 한 개쯤 어떻게 되어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늘 엄청난 사건을 터뜨리는 것이 바로 이 '나사 한 개'가 아닌가.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호의 비극이 그렇다. 그 '완전하다'던 불침의 호화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것도 지금의 나사와 같은 연결 못 리벳 한 개가 풀리면서 그 엄청난 사달을 불렀다. 그 수많은 리벳들은 항해 중 예견되는 충돌에 하나같이 다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었어야 했다. 그럼에도 나사 하나가 풀림으로써 모든 것이 종말로 이어지고 만다. 그래서 나사는 늘 점검하고 조여야하며 조여져 있어야 한다.

2003년 2월 1일, 미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는 임무를 마치고 귀환하던 중 텍사스주 상공에서 공중분해되며 탑승자 7명 전원이 사망했다. 컬럼비아호는 최초의 미국 우주왕복선으로 1981년 첫 비행 이후 22년간 총 28회 임무를 수행했으나 일순에 영원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사고 뒤 7개월간 조사 끝에 보고서가 나왔다. 이 우주선 폭발사고는 기계결함보다 나사(NASA)의 나사가 풀린 인재였다는 결론이었다. 바로 안전의 나사가 풀렸기에 그 엄청난 사고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요즘 우리 곁에서 자주 들리는 소리가 있다. "나사가 빠졌다"는 것이다. 정치가 온전해야 나라가 제대로 갈텐데 큰 일 났다. 이 쪽은 나사가 풀려도 한참 풀린 곳이다. 당장 조여주지 않으면 당사자는 패가망신이요, 나라가 거덜나게 생겼다. 큰일이다. 사방에 조여야할 나사들이 좍 널려있다. 지금 웃을 때가 아니다. 성난 얼굴로 나사를 조여라. 내 나라가 망하는데도 헤설픈 웃음으로 방관만 하고 있을 텐가.

〈강이산·극작가〉

‘청춘 양구’가 다시 뛰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양구 **서흥원** 군수 인터뷰

인터뷰하는 서흥원 군수.

백두대간이 남쪽으로 내달리다 태백산맥을 만나 어우러진 곳, 바로 강원도 금강산 남쪽에 자리 잡은 양구(楊口)가 한반도의 배꼽에 해당한다. 금강산 1만 2천봉의 제일 남쪽 막내 가칠봉(1,242m)과 대암산(1,312m), 사명산(1,196m), 대우산(1,178m) 등 1천m가 훌쩍 넘는 고산에 둘러싸여 있는 산악분지에 자리 잡고 있다. 북쪽에 파로호, 남쪽에 소양호가 용이 꿈틀거리는 형상으로 가로로 길게 누워 있어 곳곳에 사계절 절경을 선물하고 있다. 휴전선 접경지대이다 보니 군사도시로서 오랫동안 개발 소외지역으로 남아 인구가 점차 줄어 이제 겨우 2만 명을 버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양구는 미래가 약속되어 있는 고장이다. 다른 곳에서는 만끽할 수 없는 100% 청정한 자연과 숨겨져 있었던 역사와 문화가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옛 조상 예맥의 근거지로 고구려의 역사 향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한국을 대표하는 미술가 ‘박수근 미술관’을 찾는 문화인들의 발길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가 하면 조선 백자의 메카 ‘방산 백자박물관’이 양구의 트레이드마크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최근엔 체육선수 전지훈련 장소로 크게 각광을 받고 있어 사시사철 전국에서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있다.

유레카!!! ‘청춘 양구’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곳곳에 붙어 있는 “양구에 오시면 10년은 젊어집니다”라는 현수막의 구호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다. 바로 ‘청춘 양구’의 기관차를 운전하고 있는 생각이 젊고 가슴이 뛰는 지도자 서흥원 군수가 사자후를 토한다. “개발은 비록 늦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양구의 매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구에 오셔서 사시면 20년 젊어지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당차다. 그의 손에 달려 있는 양구의 앞날을 보는 듯하다. 그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퍼부었다. **(편집자 註)**

가슴설레게 하는 자연힐링의 고장 박수근미술관 등 문화자산이 손짓

-도대체 양구가 어째서 살기 좋은 고장입니까?

두 말 말고 와서 살아 보시면 압니다. 우선 시끌벅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귀해 인심이 후합니다. 서울에서 멀고 휴전선 접경지대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그동안 개발과 멀어 청정한 자연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년 열 두 달 공기 좋고 물 맑고 깨끗한 햇빛이 내려 쬡니다. 한마디로 모든게 건강합니다. 사람도 건강하고 자연도 건강합니다. 살기에 최적 조건을 갖추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자연환경만 좋으면 뭐합니까? 살기가 편해야지요.

맞습니다. 교통이 편해야 되고 먹고 살기가 풍족해야지요. 예전엔 양구에 오시려면 춘천에서 46번 국도를 따라 배후령 고개를 넘거나 소양호 뱃길로 와야 했습니다. 서울에서 5~6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서울~양양간 고속도로가 생기고 곳곳에 터널이 시원하게 뚫려 서울에서 2~3 시간 밖에 안 걸립니다. 앞으로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지역을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뚫리고 2029년 동서고속화철도가 개통되면 교통은 훨씬 편리해집니다. 지역경제도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을 적극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에 저를 비롯해 전 공무원이 뛰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 본격적인 도약을 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구에 가면 한국을 대표하는 미술가인 박수근미술관을 꼭 들러야 한다.

-최근 양구가 신흥스포츠도시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는데…

자연 환경이 뛰어난 지역적 특성을 살려 20년 전부터 스포츠마케팅을 양구군의 주요 시책사업으로 선정해 노력해온 결과 이제는 스포츠 메카 이미지를 확고히 심었습니다. 매년 100여개의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가 양구에서 열립니다. 특히 전지훈련 장소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어 매년 90여개 학교 및 성인 스포츠팀이 양구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스포츠와 관련해 외지에서 약 30만명이 방문해 309억원의 경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양구를 사계절 관광 및 휴양도시로 자리매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구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문화 매력 100선, 로컬 100지역 문화 명소로 선정한 박수근미술관과 백자박물관이 있습니다. DMZ 펀치볼 숲은 산림청 주관 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으로 선정되었고 대암산 생태탐방로, 사명산 둘레길, 오유발길 등은 강원 명품숲길 50선에 선정되는 등 관광자원이 널려 있습니다. 소양호를 활용한 꼬부랑길, 순환 호수길 등이 개발 완료되면 힐링의 명소로 각광받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양구를 대표하는 축제를 크게 활성화 할 계획도 있습니다. 양구에는 곰취축제, 배꼽축제, 펀치볼 시래기·사과 축제 등이 매년 벌어지는데 계속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곰취축제는 10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참여해 양구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지요.

-양구군의 캐치프레이즈가 ‘다시 뛰는 청춘 양구’인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양구를 단순히 잘 사는 고장이 아니라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명품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청정 자연환경을 활용한 휴식과 힐링의 도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안보가 어우러지는 명품 관광도시가 바로 제가 꿈꾸는 ‘청춘 양구’입니다.

(정리 : 이규진 총괄부회장)

회우 칼럼

아사히신문 역사를 아시나요?

김수종
본회 회우
전 한국일보주필

아사히신문 창간 때 걸렸던 목판사호 앞에서 방문단 일행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사히(朝日)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인 귀에도 꽤 익숙해진 일본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겐 '맥주'가 떠오를 것이고, 국제문제에 관심을 가진 장년층에겐 '아사히신문'이 생각날 것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아사히신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9월 초 대한언론인회(회장 장석영)의 국제교류단에 끼어 일본 간사이(關西) 지방을 둘러봤습니다. 여행의 제1목표가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 2025' 관람이었지만, 사람이 너무 몰려 일본·미국·이탈리아·프랑스 등 주요 국가 전시관에 들어가려면 섭씨 36도의 폭염을 참으며 땡볕 아래서 2시간 이상 줄을 서야 했습니다. 결국 국가전시관 관람을 포기하고 아사히 맥주 한 캔을 사들고 이번 엑스포 건축의 정수로 꼽히는 '그랜드 링(Grand Ring)'을 한 바퀴 돌며 바닷바람을 마시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랜드 링은 높이 20m, 폭 30m, 길이 2㎞의 세계 최대 목조 구조물로 박람회장을 에워싸고 있었으며, 옥상은 데크 산책로, 지붕 밑은 관람객 통로 및 휴식처로 쓰였습니다. 삼나무와 편백 목재로 지은 일본스러운 설계였습니다.

이번 일본 여행에서 의미 있는 수확은 아사히신문 오사카 본사 방문이었습니다. 아사히신문 하면 도쿄가 당연히 떠오르곤 했는데, 이번에 아사히신문이 1879년(메이지 12년) 오사카에서 창간하여 초판 3천 부를 발행했고, 1888년 도쿄 아사히신문을 창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사히와 함께 일본 3대 신문을 이루는 요미우리(讀賣)나 마이니치(每日)도 오사카에 본사가 있지만, 고향에 터를 잡은 아사히 오사카 본사 기자들은 남다른 정서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아사히 창간을 주도한 사람은 오사카의 상인이자 언론인 무라야마 료헤이(村山龍平,1850~1933)로, 명치유신으로 근대화를 지향하는 일본 국민들에게 변화하는 시대상을 알릴 필요를 느껴 창간했다고 합니다. 신문 이름도 "아침 햇살처럼 밝게 국민을 비추겠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아 '朝日'로 지었습니다.

오사카 본사의 타쓰자와 마사유키(龍澤正之) 편집국장이 직접 편집국 구석구석을 안내하며 신문제작 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경찰청과 천황가 취재를 맡았던 사회부통으로, 작년 이곳 편집국장으로 오기 전 도쿄 본사 사회부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원로 언론인들을 안내하고 간담회를 가질 때 '선배님'이라고 깍듯이 예우했습니다. 통역은 서울특파원을 지낸 나카노 아키라(中野晃) 사회부 기자가 맡아 주었습니다.

오사카 본사는 이름값에 걸맞게 편집국 규모가 대단히 컸습니다. 기자가 거의 4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오사카 본사는 도쿄 본사와 기사를 공유하지만 편집과 발행은 독자적으로, 일본 간사이 지역 독자를 상대로 합니다. 도쿄와 오사카 본사의 차이는, 오사카에는 정치부와 국제부가 없다는 점입니다. 해외 특파원과 정치관계 취재는 도쿄가 전담하며 기사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물론 도쿄 본사 기자 수는 훨씬 많아 1,000명쯤 된다고 합니다.

편집국은 각 부서별로 구획되어 있었지만, 창가 쪽 넓은 공간에는 테이블이 듬성듬성 놓여 있었고, 그곳에서 기자들이 노트북을 펴고 일하거나 쉬고 있었습니다. 프리랜서 기자들이 일하는 공간이지만 일반 기자들도 자유롭게 이용한다고 합니다. 벤처기업 사무실 같은 근무환경이었습니다. 디지털화한 편집국 풍경은 30년 전 내가 서울에서 일하던 신문사와는 판이해서, 세월의 흐름을 실감했습니다.

편집국 투어가 끝나고 회의실에서 편집국장, 논설실 부주간, 편집위원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서울의 신문가에선 이미 사라진 '호외'가 일본에서는 상징적으로 남아 있고, 호외가 나오면 방송이 보도한다는 흥미로운 현상도 들었습니다. 연재소설과 바둑 기보도 여전히 실린다고 하니, 신문편집 변화가 서울쪽이 더 급격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방문단 일행이 "한국 젊은이들은 신문을 읽지 않는다"고 한탄하며 일본 사정을 물었습니다. 아사히신문 간부들은 "신문 경영이 갈수록 어렵다"는 말을 하며 일본대학생들의 신문 구독에 대한 무관심을 언급했습니다. 편집국장은 "아사히신문의 존재조차 모르는 일본 대학생이 50%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일본 대학생이 아사히신문을 모르다니 이럴 수가" 하는 탄식이 나왔습니다. 이 한마디가 여론 형성의 리더로서 신문의 미래가 밝지 않음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발행 부수는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아사히는 800만 부에 가까웠으나 지금은 약 350만 부로 줄었습니다. 요미우리는 한때 1,000만 부에 육박했지만, 지금은 660만 부 수준이라고 합니다. 진보와 자유 성향의 여론을 이끄는 아사히의 위상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독자층의 고령화와 젊은 세대의 무관심이 신문 산업의 가장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일본 지하철을 탔는데 신문 읽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고, 간혹 책을 든 사람은 있었지만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느낀 점은 기술 변화가 언론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픈된 편집국, 자유롭게 이동하며 기사 쓰는 기자들, 디지털 플랫폼 중심의 기사 생산은 효율적이지만, 동시에 신문 고유의 품격과 심층성은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한 세대 전 일본신문은 번영을 누렸고 그 편집체제나 컨텐츠는 우리나라 신문들이 배우거나 참고하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사히 오사카 본사에서 본 풍경은 일본 언론도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활자를 읽고 사유하는 문화가 무너진다면 신문 저널리즘의 본질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종이신문의 시대는 저물고 있지만, 진실을 향해 가는 기자 정신만은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달의 시

광장의 외로운 바람

외로운 절규가 피를 토하는
광장의 아스팔트 위로
먹구름 떼가 반란군처럼 몰려오네

추악한 민주주의에 취한
조작된 우상은
중의(衆議)정치, 숫자의 힘으로
마법처럼 태풍을 몰고 와서
광장의 사람들을 날리려하네

광장의 사람들은
북을 울려 지축을 달구고
소리 합쳐 함성을 이루니
그 함성은 태풍을 타고
사방으로 퍼지네

광장의 외로운 바람은
어느새 한 줄기 빛이 되어
목구멍에서 피가 나올 때까지
소리 질러 태풍에 맞서며
가짜의 가면을 벗기려
의식 마비증에 걸린
색맹 눈 뜬 장님들의 잠가진
가슴을 찌르네

불꽃처럼 찬란하게 타오른 절규는
곧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 되어
진짜 민주주의 세상을 비추는
불멸의 빛이 되리라

김 화
시인·영화평론가

1879년 오사카서 초판 3000부 발행

연회비 감사합니다

연회비 납부 : 〈2025.9.25 ~ 2025.10.27〉
〈괄호 안은 연도, 단위 ; 원〉

■ 연회비: 30,000원 ■ 평생회비: 300,000원
계좌 번호 : 농협 056-01-105628
예금주 대한언론인회

회비

조덕연(2025) 30,000 이보길(2025) 30,000
박종서(2025) 30,000 김관상(2025~2026) 60,000
전의식(2026) 30,000

회우가 낸 새책

한국언론 연대기 저자 정진석(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원로 언론사학자인 저자가 조선 시대 왕조 조보(朝報)부터 2024년에 이르는 한국 언론사를 정리해 대백과사전식 미시사(微視史)를 출간했다. 전근대 필사신문에서 시작하여 최초의 근대신문 한성순보, 독립신문, 일제강점기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거치며 파란만장했던 언론 역사를 날짜에 따라 정리하되 사건의 의미까지 객관적으로 담은 방대한 자료집으로서의 가치를 지녔다.

특히 큰 후유증을 남긴 경우에는, 몇 년에 걸친 복잡한 관련 사항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사태의 전모를 파악하기 쉽게 했다.

(민속원 간행 728페이지, 73,000원)

포스코(포항제철) 오디세이아 저자 :백인호

(본회회우·전 매일경제 편집국장·MBN 대표이사)

포철을 중심으로 중화학공업을 성공시킨 대한민국 공업 강국의 발달사를 체계적으로 다뤘다.그 중심은 포항제철 성장 스토리.

경제 선진국으로 뛰어갈 구상을 갖고 이를 성공시킬 인재를 찾고 있던 박정희에게 점찍힌 인물이 박태준 당시 대한중석 사장. 그러나 그 역시 문외한임에도 오늘의 포항제철을 국민기업으로 키워내는 기적을 이뤘다. 포항제철의 성장사에 주안점을 두고 쓰여진 이 책은 박태준 회장의 리더십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도서출판 정음서원 간행 472페이지, 25,000원)

만보회 쌀쌀한 날씨 속 조선의 숨결 만끽

대한언론인회 만보회(회장 최귀조)는 지난 10월20일 쌀쌀한 가을 날씨 속에서 조선 왕실의 사당인 종묘에서 제16차 걷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회원들은 종묘 해설사의 섬세하고 명쾌한 설명을 들으며 조선 왕실의 숨결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었다.

참석자는 강두모, 김기원, 김홍운, 박종서, 박원배, 안종우, 안홍렬, 유진수, 이경식, 조명동, 최귀조, 최영배.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송호창 회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미금1로 58 까치마을 선경아파트 403동 701호

회우동정

대한민국 보도사진전

장석영 대한언론인회 회장(오른쪽부터 세번째)이 사진작가들과 한국보도사진가협회 주최 제1회 '사진은 역사다-7080 대한민국' 보도 사진전을 둘러보고 있다.

전시회는 협회 소속 원로 사진기자들이 1970년부터 1989년까지 역사의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 60여 점을 선보였다. 수십 년간 빛을 보지 못했던 귀한 작품들을 통해 급격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열기 속에서 변화해 온 우리 사회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세계효운동본부 '올해인물' 최고대상 수상

장석영 본회회장이 지난 10월 28일 세계효운동본부(이사장 진요근) 창단 16주년 기념식에서 '2025년 올해의 인물' 최고대상을 수상했다. 장 회장은 한국의 효정신문화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꽃피우는데 적극 동참해 온 공로가 인정됐다.

박정희 대통령 46주기 추도식

정재호 원로회우(민족중흥회 회장·박정희 대통령 제46주기 추도식 위원장)는 10월 26일 서울 국립현충원 박정희 대통령 묘역 앞에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 서거 제46주기 추도식을 거행했다.

'영원한 관광인' 대상 수상

소재필 회우(본회 국제교류위원회 간사·PATA 종신회원·Travel Press 발행인)는 지난 9월 4일 태국 소재 PATA 본부를 방문하고 2026년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경주·포항에서 공동개최되는 PATA 연차 관광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문제를 협의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상' 수상

손일근 원로회우(93·사진)가 한국일보가 수여하는 제2회 '자랑스러운 한국인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서울 출생인 손 회우는1955년 서울법대를 졸업, 한국일보에 입사해 논설위원, 출판국장 등을 거쳐 1983년부터 이사와 상임고문을 역임했다.

『나는 죽을 때까지 기자다』 출판기념회

김용발 회우 (전 본회 부회장)의 저서 『나는 죽을 때까지 기자다』 출판기념회가 지난 10월 17일 코리아나 호텔 3층에서 성대히 열렸다. 유자효 한국시인협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황교안 전 총리, 이인호 전 KBS 이사장, 김용원 전 조선일보 편집국장 등 정·재계·언론계 다수의 인사가 참석, 축사를 했다.

언론가 소식

'이승만 걷기대회' 11월 22일

대한언론인회(회장 장석영)가 공식 참여하고 있는 이승만바로알기국민연합(대표 변정일)은 올해 이승만 건국대통령 탄신 150주년과 서거 60년을 맞아 오는 11월22일(토) 오전 서울광장과 남산 둘레길 일원에서 "이승만과 함께 걷자" 시민대행진 행사를 개최한다. 24개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하는 이 행사에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사는 당일 오전 10시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개회식을 치른 후 남산공원 백범 광장에서 부터 남산 둘레길 (북쪽 사면)을 거쳐 장충동 자유총연맹에 이르는 2.4km 구간에서 펼쳐진다. 행사 구간 곳곳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주요 업적을 소개하는 사진전 등 각종 이벤트가 펼쳐질 예정이다.

KBS 박장범 사장 ABU 부회장 피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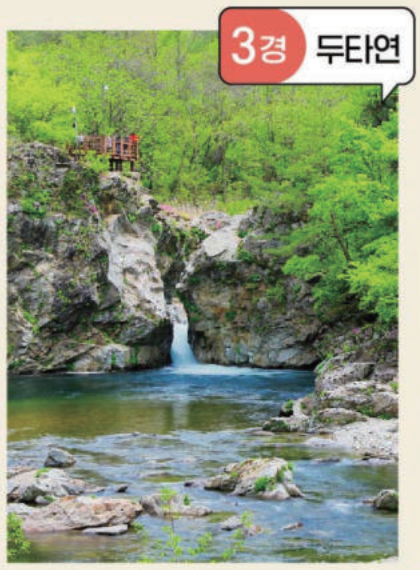
KBS 박장범 사장이 최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제62회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ABU) 총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ABU는 이번 총회에서 부회장직을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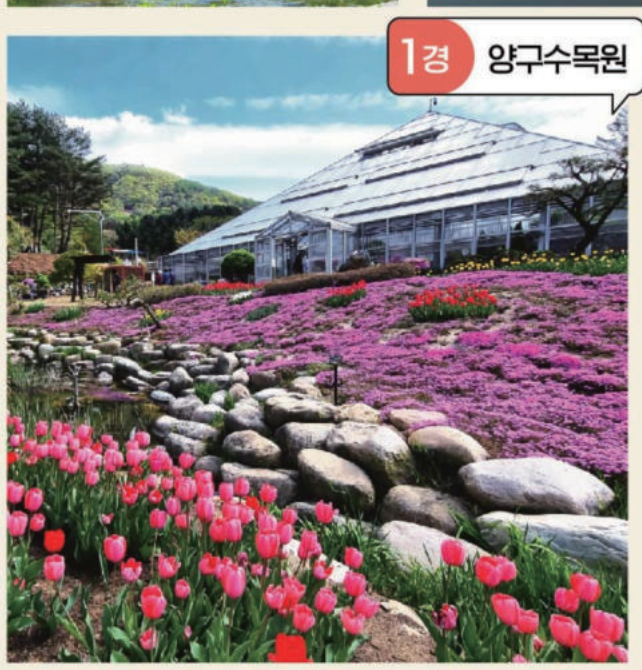
월간 대한언론
Korea Journal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석영
· 주 필 이도선
· 총괄부회장·사무총장 이규진
· 편집위원장 최명우
· 편집국장 송창기
· 발행처 (우)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kjclub.or.kr
· 홈페이지 :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청춘양구

양구9경 구경갈시간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집니다

www.ygtour.kr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가 서울을 바꿉니다

불편을 편리하게!
위험을 안전하게!
부패를 청렴하게!

제보기간 | 2025.9.12.~10.31.
제보방법 | 02-2180-7883
www.smc.seoul.kr

2025 행정사무감사 기간 | 2025.11.4.~11.17. (14일간)